

NGO SERIES #17



한반도 통일과 재야단체 통일론의 실체

제성호·유동열

 자유기업원

훑어보기

4.19 이후 국내 재야단체들은 정부의 통일방안과는 다른 ‘민중통일론’, ‘민족통일론’, ‘자주적 평화통일론’ 등을 다양하게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제’를 지향하는 통일을 명시한 이래, 이른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기치 아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정당화하는 통일론이 공론화되고 이의 지지, 확산이 노골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 국내 재야단체 중에 각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교조, 통일연대, 전국연합, 한총련 등 10여개 단체들의 통일관과 통일방안을 분석해본 결과, 이의 실체는 바로 평화통일방안으로 위장된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수용한 것이었다. 재야권에서 마치 진정한 자유민주 평화통일방안 인양 선전하고 있는 ‘자주적 평화통일방안’이란 결국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방안을 ‘분단고착화방안’ 등으로 부정하고 북한의 통일원칙과 연방제통일방안 등 북한의 통일과 통일노선을 일방적으로 정당화하고 지지, 선전하는 것이었다.

물론 재야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통일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정부의 통일방안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자유민주체제 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탓할 사안이 아니나, 문제는 이들 재야통일론이 대부분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을 정면 부정하고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여과없이 수용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 채택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적화혁명노선에 영합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이념과 우리민족의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발전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 우리가 희구하고 추진해야 할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안전과 행복 및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야권이 정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생각한다면 북한정권의 통일노선을 무분별하게 표절하고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민족의 발전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평화통일론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목차

훑어보기	2
I . 머리말	4
II . 한반도 통일의 기본이해	6
1. 한반도 통일의 의의	6
2. 한반도의 통일 환경	8
III. 남북한 통일노선 분석	16
1. 한국의 통일노선	16
2. 북한의 통일노선	22
3.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42
IV. 재야단체의 통일론 분석	47
1. 재야권의 개념과 단체선정	47
2. 주요 재야단체의 통일론	48
3. 재야통일론의 평가와 문제점	87
V . 맺는 말	93
1. 향후 전망	93
2. 대처방안: 올바른 통일론 조성을 위한 제언	95
참고문헌	100

I. 머리말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국내 재야운동권 내에서는 이른바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기치 아래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을 부정하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정당화하는 통일론¹⁾을 집중 제기하고 이의 지지, 확산에 주력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 정부의 통일방안과 다른 민간부분의 통일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4.19혁명 직후부터이다.²⁾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50년대 제1공화국 시기에는 정부의 통일론 외에는 통일논의 자체가 불온시 되어 민간부분에서의 통일논의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특히 6.25 남침전쟁을 겪은 이후 이러한 현상은 일반화 된 상태였다.

그러다가 1960년 4.19 혁명 직후 이승만 정권에 대한 반대투쟁이 ‘남북학생교류’, ‘민간 통일논의 허용’ 등을 요구하는 통일논의로 변질되어 대학가를 중심으로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에는 일부 좌경화된 세력들이 유신정권에 항거하는 반독재민주화투쟁을 통일투쟁과 연계시키며 간헐적으로 분출시키다가, 1980년에 이르러 학원가를 중심으로 북한과 연계된 연방통일론이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르러서는 북한의 공작에 의해 남북과 해외동포를 연계하여 결성된 친북통일전선체인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주도아래 체계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해왔다. 심지어 친북재야권에서는 북한이 주창한 조국분단 50주년이 되는 1995년 통일이 된다는 ‘95년 통일설’이 통용되기도 했다.

1999년 이후에는 민주노총 등 국내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은 이른바 「조국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자주적인 민간통일운동의 4대 정치적 과제」로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확산’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온바 있다. 정부당국의 제어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재야통일론을 무분별하게 우리 사회 각층에 확산되어 왔다.

특히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채택된 6.15 공동선언 이후 이른바 남측 연합제와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간의 절충에 의한 통일논의가 공공연히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작금 6.15 공동선언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며, 북한의 연방제안을 적극 수용하는 용공통일론의 주장 등 무분별한 통일논의가 재야단체들 간에 만연하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한 통일여

1) 이들 통일론은 민중통일론, 민족통일론, 자주평화통일론, 재야통일론 등으로 불리며 우리 사회 내에 확산되고 있다.

2) 강만길, 『우리통일, 어떻게 할까요』 (서울: 당대, 2004), 114면. 여기서 4.19 운동이 민주주의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통일운동으로서도 획기적인 계기를 이루었다고 강조한다. 특히 4.19로 6.15 전쟁시 실종된 자주통일론과 평화통일론이 되살아났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이 국내 재야운동권의 일반적 시각이다.

건의 구성에 긍정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올바른 대북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혼선과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국내 재야권의 통일론들에는 대부분 특정 계급의 주도, 국가체제 조립 중심, 일거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통일노선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재야단체들은 각자 자체적인 통일관과 통일방안을 담은 다양한 통일론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재야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통일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정부의 통일방안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자유민주 체제 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탓할 사안이 아니나, 문제는 이들 통일론이 대부분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을 정면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여과 없이 수용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재야단체들이 제시하는 통일론의 성격과 실체를 분석하여, 그 폐해를 지적하고 건전한 통일론 구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대한민국 헌법정신, 즉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자유민주주의이념에 부합하는 건전한 통일논의를 유도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II. 한반도 통일의 기본이해

1. 한반도 통일의 의의

일반적으로 분단국에서 통일은 분단된 것의 재결합을 말한다. 외견상 분단의 대표적인 징표는 영토의 분단을 들 수 있다. 60년 이상 남북한은 분단선(3.8선 → 휴전선)을 경계로 독립적인 삶의 공간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공간적인 영토의 분단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남북한이 상극적인 두 이념과 체제로 대결하면서 민족사회가 갈기갈기 분열됐다는 점이다. 남과 북은 분단 상황에서 지난 시기 각기 이질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체제를 형성, 발전시켜 왔다.

때문에 우리에게 통일은 단순한 영토의 통일(통합)에 그칠 수가 없다. 통일은 각기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남북한의 사회 및 체제를 하나의 통합된 상태로 만들어 새로운 단일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통일은 한반도에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두 체제를 연결시키고 통합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의미한다. 민족공동체 형성을 통해 실현되는 통일국가는 포괄적인 생활단위로서 국제사회에서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행동단위로 기능하는 단일정부를 구성함과 아울러, 단일국민, 단일영토, 단일법체제 및 단일정치체제를 갖춘 조직체로 나타나게 된다.³⁾

이 같은 통일은 한민족에게 있어 당면한 최대의 과제이며, 점차 현실의 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현재 분단의 오랜 관성으로 인해 남북한이 인위적인 장벽을 쌓아놓고는 있지만 ‘하나의 민족’, 곧 피를 나눈 형제요 공동체라는 관념에 기초한 통일의 당위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기실 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통일이 이러한 삶의 조건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희구하고 추진해야 할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통일은 단순히 민족이라는 감성적 차원이나 당위성 차원에서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모든 통일은 선”이라는 생각은 지난 60여년의 민족분단사를 돌이켜 보면, 비현실적인 허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요체는 방법이나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혹은 미래상에 있다. 즉, ‘어떠한’ 내용의 통일이나 하는 것이다. 가령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것인가 아니면 집단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특히 주체사상을 내세우는 ‘북한식 사회주

3)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2000년대에 열리는 통일시대』 (서울 : 동아일보사, 1993), 16면

의'나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통일의 핵심 혹은 본질은 바로 '체제선택' 혹은 가치의 선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마땅히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이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야말로 민족에게 재난을 가져다주기보다는 민족 성원 전체의 보다 나은 삶, 보다 많은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방향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바, 이는 한민족이 이루어야 할 남북통일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더불어 통일은 우리 민족이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한반도의 통일이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력통일은 결국 민족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남북화해와 통합을 무산시키는 또 다른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대화, 교류, 협력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남북대화, 교류협력은 그 자체 목적이 아니며, 민족공동체 형성과 남북통일로 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기에 대화는 대화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대화, 일방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대화가 아니라 호혜적이고 생산적인 것이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합의문의 채택은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합의문 생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합의문이 합의한 대로 제때에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지난날의 남북회담은 실천보다는 만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 앞으로는 남북한 간에 신뢰를 조성하는 방향에서 대화하고 합의문을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합의된 바대로의 실천성을 갖도록 하는 남북합의문 채택 및 이행의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셋째,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남북한이 상극적인 이념을 유지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대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시에 남북한을 한 울타리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남과 북이 점진적으로 체제유사성을 확보하며 이를 제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곧 북한의 개방과 변화,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체제수렴과 접근을 향해서 남북한이 함께 힘을 모을 때 통일이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지적과도 같이 통일문제는 이중성을 안고 있다. 곧, 한반도 분단이 그랬던 것처럼 통일은 민족내부적 측면과 국제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역시 그러하다. 이 점에서 통일은 남북한이 당사자 원칙에 따라 대화하고 화해·협력하는 등 자주적 노력을 기울일 때 보다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주변 4국이 모두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통일은 주변국의 협력과 뒷받침이 있을 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현실적 제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남북한의 성급한 통일 추진 혹은 무리한 물리적 결합 시도는 예상치 않은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우리로서는 차분하고 질서 있게 남북화해·협력과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주변국들이 여기에 반대하지 않도록 만드는 주도면밀한 통일외교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2. 한반도의 통일 환경

(1) 한반도 통일의 국제환경

1) 주변 4국의 역학관계

1980년대 중반 이후 전개된 소련의 개혁·개방정책과 사회주의권의 근본적 체제변화는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를 초래하였고, 동·서 양 진영 간의 냉전적 대결구조를 해체시킴으로써 이후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국제질서 재편을 촉진하여 왔다. 탈냉전 혹은 냉전 이후(Post-Cold War)의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는 이념·체제·제도간의 갈등과 대립이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평화와 경제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신 국제질서 하에서 각국은 대내외정책의 현실적 조정을 통해 정치·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및 탈이념의 세계사적 조류는 동북아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한·중 및 한·러 수교, 일·북간 수교협상 개최, 북·미 제네바합의 등 탈냉전적 양자관계의 재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이와 관련해서 다자간 경제·안보협력문제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지역은 아직까지 ‘안정과 불안정’이라는 양면성, 그리고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 말하자면 이 지역에서 한편으로 평화와 번영을 향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도, 여전히 위기와 갈등의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의 핵문제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구조적 양면성과 불확실성은 무엇보다도 역내 강대국간의 세력관계 변화 가능성으로 인한 유동성과 기존의 냉전적 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성에 기인한다. 즉, 동북아지역에서는 첫째, 정치·경제·군사 등의 면에서 미·일·중·러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둘째, 중국과 북한이 여전히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있어 러시아가 이들 나라와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고 있어 이른바 ‘신냉전’(New Cold War)의 등장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잠재하고 있으며, 셋째, 한반도 분단 과 휴전체제 지속이라는 냉전시대의 유산

이 남아 있다. 이 밖에도 한·일, 일·러, 중·일 등 관련국간에 영토분쟁의 발생 혹은 재연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강대국간 세력관계 변화에 주목하면, 현재 동북아에서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와 일·중의 영향력 증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9월 이후 범세계적 반테러전쟁(특히 아프간 및 이라크 전쟁)의 개시, 북한 및 이란의 핵위기 등장, 국내 경제사정의 악화 등으로 아·태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의 축소 및 재배치, 신속 기동군화를 포함한 전략적 재조정(이른바 한·미간에 합의된 ‘전략적 유연성’문제도 그 일환이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에서의 패권적 지위 위축을 막기 위해 미국은 한국·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유지·강화하면서, 중국·러시아와의 정치·경제적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무장 노선 포기를 비롯해 김정일 정권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배합을 통해 냉전이후 시대에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 동북아지역에서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다.

일본은 「평화유지활동협력법」(일명 PKO법, 1992.6), 「주변사태법」(1998.5), 「테러대책특별조치법」(2001.11) 제정, 「신방위계획대강」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해외파병(2001.11.25 최초 파병) 및 군사적 역할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단행하였다. 한편,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정책 재조정과 범세계적 차원의 미군 재배치(Global Defence Posture Review : GPR, ‘범세계적 방위태세 재검토’라고도 한다) 계획에 따라 주일 미군의 위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하에, 미국과의 동맹 강화 및 정치·경제협력을 고리로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군사력 증강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열강으로서의 중국과의 협조체제 강화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자국의 발언권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기도하는 한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영토분쟁의 도발을 통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2005년 10월 개최한 중국 공산당 제16기 5중전회에서 후진타오 총서기는 「공작보고」를 통해 중국의 최우선 핵심과제가 경제건설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경제발전 및 국가이익 우선의 ‘전방위 외교’와 ‘실용주의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전방위 외교’는 동북아 국제환경 속에서 미·러의 상대적 영향력 감소를 자국의 영향력 확대로 연결하고,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되, 일본의 정치·군사적 팽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자국의 역할 강화, 국익 확대에 유리한 동북아 신국제 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반테러전쟁에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는가 하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중재자 역할 등 한반도 영향력

을 제고하면서, ‘책임 있는 대국’(責任大國)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해체 이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상실하였으며, 특히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신국제 질서 형성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푸틴의 집권 2기에 접어들어 6% 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고 이에 힘입어 대외적으로 ‘유라시아주의’ 노선 하에 실리·안보 중시의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북한과의 기존관계 회복, 한국·미국·일본과의 관계발전을 통해 동북아지역에서의 기득권 상실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과의 협조 하에 일본·중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는 한편, 이를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의 강대국간 세력관계는 이상과 같은 요인에 의해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 있다. 즉, 일본과 중국은 과거 미·소의 주도적 역할에 밀려 동북아의 지역열강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적·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머물렀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인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자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일·중의 움직임은 미·러의 대결구조 와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에서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미국의 구상과 구소련이 향유하고 있던 동지역에서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계승하려는 러시아의 의도와 상충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본과 중국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역열강으로서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양국간의 정치·경제·군사적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요컨대,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21세기 신국제 질서에는 강대국간의 이해관계가 상호 대립 또는 교차하고 있으며, 이는 항시 역내의 정치·군사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2) 주변 4국의 대 한반도 정책

미·일·중·러 주변 4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와 긴장완화에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현상유지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 4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체로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미국은 역내의 균형자로서 한반도문제에 주도권을 행사하면서도 남북한의 통일 노력, 즉 현상타파 시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곧, 한반도 평화라는 명분 하에 현상유지를 선호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 북한 핵문제가 김정일 정권의 대미 강경노선에 따라 장기간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방치하는 데 점차 미국 행정부

의 인내심이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문제의 근본원인이 인권탄압적·반민주적 독재정권에 있다고 판단하는 미국의 일부 근본주의적 원칙론자들이 작금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한·미동맹과 전진배치전략을 유지하면서도,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전략적 유연성 확보, 한·미연합사의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한국군 단독행사체제로의 전환), 방위비 분담률 조정 등 전반적으로 동맹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 이전에는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하였으나, 수교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자제하고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한 당사자간의 자주적 협상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런 표면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향력이 압록강-두만강까지 확대되는 한국 주도의 남북통일이 단기간 내에 실현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당면하게는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중대한 위협에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중국은 6자회담의 지속을 통해 대북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을 통해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는 등 한반도 북부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주장하는 한편, 유사시에는 한반도문제에 적극 개입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주변 4국 가운데 가장 소극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한반도가 통일되어 동북아에서 강대국으로 등장할 경우 이는 일본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예의주시하면서,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조기통일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당면한 현안인 북한 핵개발 및 미사일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미국과 가장 긴밀한 정책적 공조를 견지하고 있고, 일본 남북자문제 해결을 북·일 수교교섭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삼고 있다. 일본은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 진출을 서두름으로써 대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수교 이전에는 북한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으나, 현재는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통해 정치·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즉, 정치·군사적으로는 북한에, 경제적으로는 한국에 각각 기울어지는 이중적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나름의 이유가 있으며, 그들의 안보불안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다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는 한편,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남북통일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중국이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반도의

통일은 바라지 않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변 4국은 대체로 남북대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는 공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별로 다소의 입장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통일된 한국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이 장래 각국에 적대적인 세력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적대적인 세력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일한국이 국력을 신장해 동북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서의 현상변화가 역내 불안정요인으로 되어 각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가 통일되어 역내 강국으로 등장할 경우, 역내 역학관계의 변동을 우려한 각국이 정치·군사대국화 노선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서 한반도 통일이라는 현상변경 요인의 발생을 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주변 4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으나 어느 일방의 영향력 아래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의 입장에 비추어 한반도 통일의 관건은 외세의 적극적인 개입과 영향이 없는 가운데 남북한이 자주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호기를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통일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변 4국이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일 수 있는 이유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북한정세와 한반도 통일의 전망

북한의 국가목표는 최소목표와 최대목표(중국적 목표)로 대별된다. 전자는 김정일 정권 및 사회주의 체제유지, 후자는 남조선 혁명을 통한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다. 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중국적 목표 실현을 위해 대남혁명전략 및 적화통일노선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러나 작금 남조선혁명의 실현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고, 국가 목표상의 비중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즉, 최소목표인 체제유지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제난, 식량난, 사회일탈현상의 만연 등 북한체제의 총체적 위기상황은 한반도 분단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환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 주민의 불만 무마와 김정일 권력기반 유지를 통해 체제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경제난·식량난 해소와 주민 생활조건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북침전쟁 위협론과 냉전적 대결질서(휴전체제)의 관성을 활용하는 한편, NPT 등 국제규범의 파괴·위반이란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 김정일 체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내부적으로는 폐쇄적인 통제체제를 강화하여 외부정보의 유입 차단, 반체제세력의 태동을 사전 봉쇄하는 방법으로 체제유지를 도모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구걸외교와 협박외교를 병행하면서, 특히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통해 안보·경제·외교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북한은 대남관계 차원에서 경제적 실리 확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장관급회담, 그리고 각종 실무접촉 등 남북대화에 호응하는 한편, 다방면의 교류협력에 나서고 있다. 또한 체제생존 및 외자유치 차원에서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북한이 경제적 위기를 한국과의 경제협력 및 미·일과의 관계개선 형태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맹국인 중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원조만으로는 북한의 경제회생을 이룩하는 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남조선 혁명노선을 전면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남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곧,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남 적화혁명노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해야 하는 여건 속에서 북한은 대남전략상의 이중성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관계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우리가 북한과 상호이익을 도모하면서 그들의 대남전략 및 통일노선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북정책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북한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테면 북한의 선동, 위협, 억지 등 비합리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의연히 대처하되, 보다 많은 접촉·대화·협력을 통해 북한 변화 유도의 여건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바대로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의 토대 위에서 남북한간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룩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가 지속될 경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과정은 상당한 진통을 수반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가 언제까지나 지난날과 같은 냉전지대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한반도에서도 탈냉전의 과정이 서서히 시작되는 최근의 국제정세 흐름과 북한이 대미 협상을 통해 체제보장과 안정을 확보하는 실리추구적 태도를 감안할 때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향후 남북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한반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대세이며, 남북관계도 이 같은 큰 틀 속에서 평화와 화해·협력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문제가 당면하게 남북관계 진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들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변 4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변 4국이 한반도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부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환경과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평화공존이 제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내외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점은 다행한 일이다. 특히 남북한이 자주적 노력에 의해 민족화합·민족공영을 지향할 경우, 주변 4국이 여기에 적극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점차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과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로의 진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사실상의 통일’이라 함은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지와 주변정세의 변화에 맞게 남북한이 민족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상태,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구도에 따라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화해와 단합을 달성해 나감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남북연합(Korean Commonwealth)의 제도화단계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는 동북아지역의 급격한 역내정세의 변동을 야기하지 않고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사실상의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앞으로 15-20년 내에 북한은 과거 반세기 동안 변화와 개방을 거부했던 것과는 달리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2020년경이 되면, 남북한간에 초보적인 민족공동체 형성 혹은 ‘사실상의 통일’ 상황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흡수통일의 우려를 불식하고, 그들 스스로 안심하고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일관성 있게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긴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의 지속 추진은 우리 정부가 과다한 대북 뒷거래 없이 정당한 대북교류협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과 남남갈등을 적절하게 소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사실상의 통일’과는 달리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국적, 하나의 법질서로 남북한이 통일하는 소위 법적·제도적 통일은 2020년 이후, 이로부터 또 상당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요컨대, 우리는 통일한국이 동북아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천명할 경우 평화로운 상태에서 민족통일을 안정적으로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주변 4국도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증진에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므로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조심스럽게 전망해도 무방할 것 같다.

III. 남북한 통일노선 분석

1. 한국의 통일노선⁴⁾

현재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1989년 9월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하여,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제49주년 경축사를 통해 발표된 「한민족공동체형성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약칭: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직후 김대중 정부는 1980년대 말 국회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 하에 마련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통일방안은 바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1) 통일의 철학과 접근시각

1) 통일의 기본철학과 이념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사의 큰 흐름일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이며, 모든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가 되고 있다. 지난 1세기동안 우리가 일관되게 지향해온 공통의 가치도 민족의 자주독립과 함께 부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통치에 종지부를 찍고 민주화를 이룬 것도 자유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힘의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수호해야 할 가치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헌법 제4조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통일국가의 미래상에서나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 내지 통일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바로 이와 같은 통일철학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민족주의를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근본바탕을 이루는 통일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족통일이 기본적으로 근대 이래의 「1민족 1

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통일원, 『8.15 대통령 경축사 해설자료』(서울: 통일원, 1994)와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서울: 통일교육원, 2007)를 참조하였다.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단일민족국가로서의 통일국가 건설은 당연히 민족주의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는 저항적 민족주의나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또한 복고주의나 감상주의와도 다른 미래지향적인 「열린 민족주의」라 할 것이다. 그것은 대외적으로 반외세 일변도의 저항적 민족주의를 극복하여 국제주의와 병존할 수 있는 포용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민족구성원 전체의 자유·평등·복지 신장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다.

2) 통일에의 접근시각: 점진적·단계적 통일론

나라 안팎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통일을 서두른다고 해서 통일이 그만큼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북한이 본질적인 정책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 있어서도 통일대비역량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통일전 서독과는 달리 아직 북한을 흡수통일할 만한 경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서독의 경우 세계 최대의 경제력과 동독보다 4배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동독도 사회주의 국가들 중 가장 앞선 경제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볼 때, 이제 겨우 중진국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남한이 인구는 2분의 1, 1인당 GNP는 20분의 1 가량 차이가 나는 북한을 흡수통일 한다면 엄청난 통일비용 소요로 남북한이 모두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변수 외에도 주변국의 협조 없이는 통일을 이룩하기 어려운 것이 또한 한반도의 현실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기 흡수통일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독일통일의 교훈에서 보듯이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태의 급격한 통일은 도리어 정치·사회적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는 1972년 12월 21일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 꾸준한 교류·협력을 통해 양 국민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분단 반세기 동안 교류는 고사하고 서신왕래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갑작스런 통일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임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 통일정책의 패러다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정책의 패러다임(paradigm)으로 민족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 민족공동체는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뿌리이며, 우리 민족이 재결합할 수밖에 없는 당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통일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는 남북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민족·민주·복지공동체를 건설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민족공동체 개념은 통일을 특정집단 또는 계급의 국가권력 장악과정이나 국가체제의 조립으로 보기 보다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남과 북이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를 어떻게 건설해 나가는 가를 더욱 중시함으로써, 민족사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치적 통합의 여건이 성숙되어 궁극적으로 단일 민족국가의 건설 즉 국가통일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2) 통일의 주체와 원칙

1) 통일의 주체

우리가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추진하는 한, 통일의 주체는 당연히 민족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어느 특정 계층이나 계급이 아니라 마땅히 남북한지역과 해외에 거주하는 7,000만 한민족의 전 구성원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즉, 통일은 반드시 민족구성원 전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하며, 통일된 조국은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이어야 한다.

2) 통일원칙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의 3원칙을 제시함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철학 위에서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통일원칙을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주 원칙이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평화 원칙이란 전쟁이나 무력행사 또는 기타 상대방을 전복하려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민주 원칙이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합절차와 방법에 의해 통일을 이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⁵⁾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민주주의 원칙에 수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처럼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고 있는 바, 통일원칙에 관해서는 과거 통일방안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 1. 통일 3원칙

자주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평화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평화적으로
민주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으로

(3) 통일과정: 3단계 통일구도

통일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룩해 나가야 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과정을 ① 화해·협력단계 ② 남북연합단계 ③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1) 「화해·협력」 단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단계

1단계인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한이 냉전구조의 산물인 적대와 불신·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서 남북 화해와 불가침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교류·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화해적 공존을 추구하는 단계이다. 말하자면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간의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단계라 하겠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북관계는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으로 현재 교착상태에 처해 있다. 따라서 현재의 화해·협력단계에서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중단된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을 성실하게 이행·실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먼저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한 각종의 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들 기구를 통해 남북한이 당면한 최대현안인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상

5) 여기서 민주주의 원칙은 과거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된 민주주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통일3대원칙의 하나인 「민족대단결」 도모원칙을 포용하는 넓은 개방적인 민주원칙으로 이해된다.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기본해설자료』 (서울: 국토통일원, 1989. 9.), 14면;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방안 해설자료』 (서울: 국토통일원, 1989. 9.11), 7면 참조.

호 신뢰를 구축하는 가운데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 분야에 있어서 균형 있게 「남북기본합의서」 및 「6.15 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이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구축을 이룩하는 가장 쉬운 길은 경제·사회·문화부문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제도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경제적으로는 상호 보완성이 있는 분야부터 교류·협력을 통하여 점차 경제공동체로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서로 간에 공통점이 있거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전통문화에서부터 교류를 시작하여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여타 분야에까지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한은 자연스럽게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화해·협력」 단계는 곧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북한을 남북대화의 장으로 유도하여 현재 동면상태에 있는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각종 협의·실천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실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2) 「남북연합」 단계: 「남북연합헌장」 이행·실천단계

분단된 남과 북이 1단계인 「화해·협력」 단계를 거치는 동안 상호간에 신뢰가 증진될 것인 바, 다음 단계에서 남북한은 이러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특히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하여 본격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평화공존 및 공영을 정착·제도화하기 위하여 쌍방이 합의를 통해 연합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민족공동체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경우에도 동일)은 공존공영의 토대 위에서 남과 북이 연합하여 단일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 궁극적으로 단일민족국가(통일민주공화국)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먼저 남북한간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The Korean Commonwealth)의 결성을 예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남북연합」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공존공영, 민족사회의 동질화,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단일국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도체제로서의 특수한 기능적 결합체(Commonwealth)를 의미한다.⁶⁾

따라서 이 단계는 남북한의 통합과정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관리하면서 민족공동체,

6) 「남북연합」의 법적 성격을 국가연합(confederation)적 국가형태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으나, 통일원은 국가연합 보다는 영연합(the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 : Commonwealth)과 유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통일원은 「남북연합」의 영문을 Korean Commonwealth로 표기하고 있다.

즉 민족공동의 생활권 내지 단일 생활공동체를 구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한은 「1민족,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는 가운데 외교·국방·경제권을 각기 보유한 채 「남북연합」이라는 기구를 통해 쌍방의 현안문제를 협의·해결하게 된다. 당연히 이 단계에서 남북한은 양측의 동수대표로 각종 연합기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통합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구의 조직과 임무는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연합헌장」 또는 「민족공동체헌장」을 채택함으로써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⁷⁾ 김영삼 정부가 이에 관한 내용을 더이상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없으나, 현정부 하에서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및 남북한의 의회대표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 및 공동사무처가 설치되어 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여기에서 남북간의 현안을 논의하고 통일을 제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요컨대 이상과 같은 점에 비추어 「남북연합」 단계는 곧 「남북연합 헌장」 또는 「민족공동체헌장」 이행·실천단계라고 할 수 있다.⁸⁾

3) 「통일국가」 단계: 「통일헌법」 이행·실천단계

마지막 3단계인 「통일국가」 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써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남북연합」 후기에 남북간의 공존공영이 정착되고 통일여건이 완비될 경우, 남북한은 「남북평의회」를 통해 통일헌법안을 마련하여 이를 남북한 주민 전체의 국민투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확정하고,⁹⁾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통일국가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국가」 단계는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을 통해 통일정부를 결성함으로써 선진민주국가를 건설하고 평화통일을 완성하는 단계, 곧 「통일헌법」 이행·실천단계라고 할 수 있다.

7)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이러한 합의문서의 명칭을 「민족공동체헌장」으로 명명하였으나, 현정부에서는 「남북연합헌장」이라는 명칭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원, 『94년도 통일홍보 기본방향』 (서울: 통일원, 1994), 11면 참조.

8)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의 기구로서 ① 남북정상회의(최고결정기구), ② 남북각료회의(집행기구), ③ 남북평의회(대의기구), ④ 공동사무처(지원기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9) 여기에서 기타의 방법으로는 남북한의 정부가 통일헌법을 남북한의 국회에 상정, 각자의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4) 통일의 방법 및 절차

전술한 바와 같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국가 실현과정의 과도체제로서 「남북연합」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 남북연합의 기능과 구체적인 통일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존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 기구(구체적으로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을 기초·채택하는 등 정치적 통일(정치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한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통일국가 수립절차를 보면, ①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기초(초안 작성) → ② 민주적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정·공포 → ③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총선거 실시 → ④ 통일정부와 통일국회 구성 등이다.

(5) 통일국가의 미래상

새로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복지·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며 세계평화에 앞장서는 선진민주국가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정치적·경제적 자유의 보장, 복지과 인권존중이 설정되고 있는 바,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복지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곧 민족 전체의 복리가 구현되는 통일된 조국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통일국가는 통일과정에서 형성된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어야 한다.

다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국가형태로서 단일민족국가, 선진민주국가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구성 방식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내용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¹⁰⁾

2. 북한의 통일노선

10) 기존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국가의 형태로서 단일국가를, 그리고 통일국가의 기구 내지 국가구성방식(또는 권력구조)과 관련하여 국회를 양원제(상원 : 지역대표성, 하원 : 국민대표성)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통일국가의 정책기조로는 ① 민주공화체제, ②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증진, ③ 민족의 항구적 안전보장, ④ 대외 선린우호관계를 제시하였다. 한편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는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통일민주공화국(민주국가)을 상정하고 있었다.

(1) 북한 통일노선의 운용원리

일반적으로 분단국가의 통일노선이란 통일에 대한 기본철학, 통일의 원칙, 통일과정 및 통일방안 등 통일에 대한 제 접근방법과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담고 있는 정책노선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통일노선은 북한의 통치자인 김정일의 이른바 ‘조국통일론’으로 대변된다. 여기서 북한당국의 통일노선을 ‘김정일의 통일노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 나라의 통일노선은 그 나라 국민들의 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방안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경우는 국민적 합의에 토대한 통일노선이 아니라 북한의 통치자인 김일성-김정일 개인의 통일관에 기반한 통일노선이기 때문이다.¹¹⁾

둘째, 북한당국 스스로가 북한의 통일노선을 ‘김정일 장군의 조국통일론’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¹²⁾ 실제 북한은 북한의 통일노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노선’이나 또는 ‘조선로동당의 통일노선’이라 칭하지 않고 ‘김정일 장군의 조국통일론’으로 지칭하며, 이를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조국통일에 대한 사상리론”이라고 명명하고 있다.¹³⁾

북한 통일노선의 운용원리는 주체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통일전략이나 혁명전략을 운용할 때 공통적으로 공산주의 철학론인 변증법적 유물론(辯證法的 唯物論)에 입각한 유물사관(唯物史觀)적 사고를 기본원리로 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물사관적 사고를 바탕에 두면서도 북한판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입각한 주체사관(主體史觀)을 행동원리로 삼는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다.¹⁴⁾

북한은 이른바 대남혁명과 통일지침서라 할 수 있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1975) 등에서 아래와 같이 혁명과 통일의 운용원리를 밝히고 있다. 즉 주체사상이 조국통일을 위한 사상과 이론 및 전략전술문제를 밝히고 있다며, 조국통일문제는 조선혁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투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듯이 북한 통일문제를 ‘조선혁명’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민족 최대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이론과 전략전술을 심오히 밝혀준다 …중략…

11) 우리가 북한을 볼 때, 북한의 통치자인 김정일 독재권력그룹과 일반 북한 주민을 이원화하여 접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12) 이는 장석,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평양, 평양출판사, 2001) 등에서 확인된다.

13) 위의 책, 1면

14) 유동열, “북한의 통일전략”, 『경찰수사보안연수소 보안수사지휘과정교재』 (서울: 경찰수사보안연수소, 2006), 참조

조국통일문제는 조선혁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조선혁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우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27권, 389페이지)

”조국통일은 조선혁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우리세대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성스러운 임무이다”

(김양성, 최철웅, “조국통일에 관한 이론”,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제5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317-321면)

여기에서 보듯이 북한은 김일성이 창시했다는 북한의 통치이념이자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이른바 조국통일이론을 완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북한의 통일노선 체계를 보면 주체사상의 원리를 수없이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북한 통일노선과 남조선혁명과의 상관성¹⁵⁾

북한의 통일노선과 남조선혁명(대남혁명)과의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의 남조선혁명을 포함한 전조선혁명의 과정 속에서 ‘통일’영역을 찾아야 한다. 북한당국의 궁극적 목표는 ‘전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실현’(일명 전조선혁명)이다. 이는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전문에 아래와 같이 잘 나타나 있다.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중)

북한의 전조선혁명은 위와 같이, 1단계(당면목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단계와 2단계(최종목표): 남북합작을 통한 사회주의혁명 단계(남북통일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바로 1단계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 부분을 북한은 ‘대남전략’ 또는 ‘남조선혁명전

15) 유동열, 위의 책, 409-411면

략'이라 표현하며, 2단계 남북합작 부분이 바로 '통일'의 영역인 것이다.

북한의 남조선혁명과정을 도식화시켜 보면 '1단계 : 미제축출(미군철수) - 남한정권 타도 - 민족자주정권(인민정권) 수립/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완수 - 2단계 남북합작(평화적 방도, 비평화적 방도) - 사회주의국가 건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의 남북합작에 대해 북한은 '조국통일의 두 가지 전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평화적 전도와 비평화적 전도가 있다고 구분하고 있는데, 평화적 전도란 전쟁없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고(남한 내부혁명을 전제로 하고 있어 결코 평화적 통일이 아님), 비평화적 전도란 전쟁에 의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북한은 평화적 전도의 유형으로 1) 남조선당국이 인민의 압력에 굴복하여 북한의 통일방안(연방제통일방안)을 받아들여 실현하는 경우 2) 남조선에 반제 자주정권이 수립되거나 중립화되는 경우 3) 남조선혁명이 승리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비평화적 전도의 유형으로 1) 미제가 조선인민에게 전쟁을 강요하는 경우 2) 미제의 침략세력이 약화되었을 경우 3) 남조선혁명이 일어나 북한에게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어 전쟁에 의한 무력통일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보듯이, 북한은 전조선혁명과정중 남북합작의 평화적 전도의 하나로 연방제통일방안을 설정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북한은 전조선혁명의 일환으로 조국통일문제를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조국통일은 조선혁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규정한다.¹⁶⁾

북한은 그들의 선전과는 달리 통일문제를 '해방'과 '혁명'의 논리에서 접근해왔는데, 그 논리는 북한은 전조선혁명을 위한 혁명기지이고 남한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점 하에 있는 미해방지구로서 혁명투쟁의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다.¹⁷⁾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은 '혁명과 해방'의 대상일뿐이며, 통일이란 전한반도의 공산화라는 전조선혁명의 일환일 뿐이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은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여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할 데에 대한 리론이다.”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3면)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의 통일노선의 기저에 깔려 있는 철학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

16) 김양선, 최철웅, “조국통일에 관한 리론”,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제5권』,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321면

17)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서울: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73-74면

선 혁명론이다. 북한은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하여 저들이 말하는 공화국의 남반부, 즉 대한민국의 영역을 미제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되지 못한 지역으로 보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를 미제의 앞잡이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합법 정부를 타도하고 미해방지역인 남조선을 혁명에 의해 해방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등 통일방안에는 당연히 남한실체 부인의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

(3) 북한 통일노선의 변천과정

일반적으로 분 북한의 통일노선은 이른바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하는 대남전략노선에 따라 시대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천해왔다. 북한의 통일노선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해보면¹⁸⁾, ① 정권수립-1950년대 통일방안 : 무력통일방안 ②1960년대 : 남북연방제, ③1970년대 : 8개항의 대남제외와 조국통일 5대강령, ④1980년대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⑤ 1990년대 :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⑥ 연방연합제통일방안(김정일의 연방제통일방안)¹⁹⁾ 등이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연방제는 약간의 전술적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1991년 김일성은 신년사를 통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기했다.

“남북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통일론은 분열을 끊임없이 지속시켜 결국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통일은 후대에게 맡기자.”

(1991년 김일성 신년사 중)

(4) 북한 통일노선의 체계와 평가²⁰⁾

1) 북한 통일노선의 구조

북한의 통일노선인 ‘김정일의 조국통일론’은 크게 조국통일관, 조국통일3대 헌장론, 민족

18) 이 부분은 통일교육원, 위의 책, 76-854면

19) 연방연합제통일방안에 대해서는 후술함

20) 이 부분은 유동열, 북한의 통일전략, 452-468면 참조

대단결 5대 방침, 연방연합제 통일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첫째, 김정일의 통일관은 조국통일에 대한 김정일의 기본적 관점과 접근자세, 통일의 성격 등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 북한은 김정일의 통일관으로 민족자주론, 민족대단결론 등을 체계화하고 있다.

둘째, 조국통일 3대헌장론은 김일성이 제시한 통일방침인 ①조국통일 3대원칙 ②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③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지칭한다. 조국통일 3대헌장이란 용어는 김정일이 1996년 11월 24일 판문점 방문시 최초로 사용했으며, 김정일이 1997년 8월 4일 발표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일명 8.4 노작)라는 논문 속에서 이를 공식화한바 있다. 북한은 김일성이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이룩한 고귀한 경험을 김정일이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해 주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셋째,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1998년 4월 18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된 「남북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50돌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김정일이 보냈다는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라는 서한 속에 제시된 통일방침을 지칭하는 것이다.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이라 불리우는 이 서한은 그간 발표된 북한의 통일노선에다가 김정일의 통일관을 추가한 것이다.

넷째,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이란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명시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은 이를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이라고 지칭하며 김정일의 연방제통일론이라 명명하고 있다.

2) 북한 김정일의 통일관

북한당국은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선 김정일의 애국애족적 통일관을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일이 과학적으로 제시했다는 통일개념은 아래와 같이 규정된다. 이 통일개념은 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외세축출)와 ②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민족대단결)로 집약된다.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8.4, 3면)

북한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통일에 대한 관점에서 보듯이, 통일문제의 본질을 첫째, 민족 자주권 확립이란 미명 하에 적화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외세(즉 미군)를 축출하는 것과 둘째, 민족적 화합과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통일문제에 대해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조국통일문제 발생의 역사적 근원을 ‘미군의 남조선 주둔과 그로 인한 국토분단’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 통치는 남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기본장애입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몰아내며 그의 식민지통치를 분쇄하지 않고서는 남조선 인민들이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13면)

김정일은 조국통일문제의 성격을 민족내부 문제로 규정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민족 지상의 과제이고 최고의 애국이라고 통일에 대하는 자세를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우리세대 내에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김정일의 조국통일에 대한 신념이며 통일의 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3) 조국통일 3대헌장

북한당국은 현 시기 북한의 통일방침은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집약된다. 이는 그간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방침인 △조국통일 3대 원칙(197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980),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1993)을 지칭하는 것이다.

①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조국통일 3대원칙이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원칙을 지칭한다. 북한은 이 3원칙이 김일성이 1972(주체61)년 5월 3일과 11월 3일에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측대표들과 한 담화에서 발표한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원칙이 공식화된 것은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의 합의에 따라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일명 7.4 공동성명)에서이다. 이 3대 원칙은 1972년 공동성명 발표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조국통일 원칙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북한은 1997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이 원칙을 「조국통일 3대 헌장」 중 하나로 정식화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7.4남북공동성명발표 10일후인 1972년 7월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와 그로부터 25년 뒤인 1997년 8월 4일에 발표한 논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조국통일3대원칙의 위상을 조국통일의 초석, 통일강령으로서 민족공동의 통일헌장이라고 규정한바 있다. 각 원칙을 해석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주원칙이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통일문제를 외세에 의거하지 않고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기네들은 자주화가 되어 있는데,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사회이기 때문에 민족자주권이 없다며 통일을 하기위해서는 남한사회의 자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내정간섭 중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평화통일의 원칙이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기네들은 평화적 정세가 조성되어 있으나, 남한은 틈스파리트 훈련과 같은 대규모 북침전쟁훈련과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며 비평화적 정세를 조성하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평화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선 “핵무기 철거, 한반도 비핵지대화, 군사훈련 중지, 북미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한다.

셋째,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각 원칙을 해석함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란 남북한 국민이 이념과 제도를 초월하여 대단결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나, 북한은 남한정부가 반북대결정책, 반민족반통일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비방하며 민족대단결원칙의 실현을 위해선 「국가보안법 철폐, 공산당의 합법화, 양심수 석방」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조국통일3원칙의 내용을 보면 결국 대남적화노선의 걸림돌이 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군사적 공백상태를 초래하고, 제한적 방어훈련인 한·미 군사훈련을 저지하여 군사력의 저하를 노리고,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켜 공산당을 합법화하고 남한 내의 간첩이나 친북좌익세력의 활동을 고무하여, 남한사회의 혼란을 조성한 다음 무력으로 적화통일하겠다는 저의를 보여준 것인바, 유념해야 한다.

②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1980년 10월 10일 제6차 조선노동당 대회시 김일성이 밝힌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다. 김정일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며,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가정 공정하고 순조롭게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

이 방안은 김일성의 연방제방식에 의한 통일국가수립전략이 구현된 것이며, 남북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 정부를 그대로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연방국가를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통일국가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북한이 1960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한 통일의 중간걸음으로서의 남북연방제와는 달리 그 자체가 완성된 통일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선전되고 있다. 과거 남북연방제가 총 선거를 통해 통일적 중앙정부의 수립으로 나아가는 과도적 형태였다면, 고려민주

21)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8.4)

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연방국가 형성으로 통일국가의 수립을 완성하는 형태이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이상적이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이고 완성된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하며, 김정일에 의해 조국통일3대헌장의 중요구성 내용으로 정립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것이다.”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8.4, 22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② 연방제 구성원칙과 운영원칙 ③ 10대 시정방침으로 구성된다.

□ 선결조건

북한은 연방제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한국의 반공법, 국가보안법 폐지 및 폭압통치기구 해체 △모든 정당·단체 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한국사회의 민주화(인민민주주의적 정권으로 교체) △미·북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조선의 내정간섭 및 두 개의 조선책동 중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남조선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적인 악법들을 폐지하고 모든 폭압 통치기구들을 없애버려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하고 정당·사회단체·개별적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며, 부당하게 체포, 투옥된 민주인사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벌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군사파쇼정권을 평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교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오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다... 미국 당국자들은 남조선에서 지기의 군대를 하루빨리 철거함으로써 미국인민을 포함한 세계인민들의 일치한 염원과 의사에 맞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김일성,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시정연설, 1980.10.10)

□ 연방제 구성과 운영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구성과 운영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일에서 남과 북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한다.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를 지도한다.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모든 분야에서 단결, 합작을 실현한다. △북과 남의 지역정부는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 전민족적 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

□ 10대 시정방침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며, 연방제가 실현되었을 때 시행할 정책으로 이른바 「10대 시정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 자주적인 정책 실시 ②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 실시, 민족대단결 도모 ③ 북과 남의 경제적 합작·교류실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 ④ 과학 문화·교육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 실시, 과학기술·민족문화예술·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 ⑤ 남북간의 교통·체신연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체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⑥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인민의 생활안정 도모 복리증진 ⑦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⑧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옹호 보호 ⑨ 남북이 통일이전에 타국과 맺은 대외관계 처리, 두 지역정부의 제활동 통일적 조절 ⑩ 전 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발전,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 실시 등이다.

표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체계

항목	제의내용
연방제 선결조건	- 남한사회의 민주화 및 헌정권 퇴진 -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폐지 -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 사회단체 및 개인사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 주한미군 철수 및 조·미 평화협정 체결 - 미국의 2개 조선 조작책동 및 내정간섭 중지
연방제의 구성 및 운영원칙	- 남북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북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 -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지닌 지역자치제 실시 -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 - 『최고민족연방회의』에서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연방정부기구)를 조직하고, 상설위원회는 남북 지역정부를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 사업을 관할 - 연방국가의 국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연방정부/ 지역정부의 기능	- 연방정부는 정치문제·조국방위문제·대외관계문제·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이익과 관계되는 공동문제 등에 대해 토의·결정하고(토의·결정기능),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북간의 단결·합작을 실현함(사업추진기능). - 지역정부는 연방정부의 지도 밑에 전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 정책을 실시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북간의 차이를 해소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도모함.
10대 시정 방침	- 자주성 견지 및 자주적 정책 실시: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 '불력' 불가담 국가로 되어야 함. - 민주주의 실시: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 실시, 민족대단결 도모 - 경제적 합작과 교류: 북과 남의 경제적 합작·교류실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보장 - 과학·문화·교육분야의 교류·협조: 과학·문화·교육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실시, 과학기술·민족문화예술·민족교육의 통일적 발전 - 교통·통신 연결과 자유로운 이용: 남북간의 교통·체신 연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체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 근로대중의 생활안정 도모: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노동대중과 전체인민의 생활안정 도모, 복리증진 -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북과 남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민족연합군조직,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보위 - 해외동포의 권리·이익 옹호: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 옹호·보호 - 대외활동의 통일적 조절: 남북이 통일 이전에 타국과 맺은 대외관계 처리, 두 지역정부의 제활동 통일적 조절 - 평화애호적 대외정책 수행: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 발전,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 실시
연방국가 통일정부의 장	- 연방국가 통일정부의 장, 남북이 윤번제 운영 - 북과 남이 각각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의 공동의장과 연방상설위원회의의 공동위원장을 선출하고 쌍방에서 윤번제로 운영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평가>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한마디로 요약 평가하면, 위장된 평화통일방안이며 바로 적화통일을 은연중에 위한 선전전술에 불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주장하는 ‘사상과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존중(초월)하는 연방제방식의 통일’이란 겉으론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이는 현실 불가능한 통일론이다.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연방제란 미국(자본주의)이나 구 소련(사회주의연방)과 같이 체제를 통일해서 하는 것이지 체제를 달리하면서 연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역사적 선례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이 방안은 “국가보안법 폐지, 폭압통치기구(당시 안기부 등 대공수사기관을 지칭) 해체,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 모든 정당, 사회단체의 합법화(공산당 합법화를 의미), 남한의 민주정부 수립(용공정권 수립의미)”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적화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무력통일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셋째, 북한은 연방제통일의 상대를 한국의 현정권이 아니라 현정권을 타도하고 들어서는 ‘민족자주정권’(또는 자주적 민주정권)을 설정하고 있어 현정부를 배제하고 있다. 여기의 민족자주정권이란 한국정권이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정권이기 때문에 미제를 축출하고 정권을 타도한 후 들어서는 용공정권을 지칭하는 것이다.

넷째, 이 방안은 그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평화통일방안이 아니라 한국내부의 혁명(미제축출과 정권타도 후 용공정권 수립)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했지만,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은 북한과 한국의 현정권이 연방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한국의 현정권을 타도하고 들어서는 용공정권과(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이 방안에서 통일시까지 과도체제가 아닌 「완성된 통일국가형태의 연방제」를 주장하나 그 내용은 단일주권의 연방국가와 또한 국가간의 동맹으로 구성되는 두 주권의 국가연합을 동시에 만들자는 모순을 내포, 하나의 통일된 어떤 국가도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연방(Federation)과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구별이 모호하다

특히 통일과정을 무시함으로써 통일에 이르는 과도기구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통일국가의 기구로서 전술한 바와 같은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김일성은 이와 같은 연방제안이 비현실적임을 인정하고, 1991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잠정적으로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통일은 후대에 일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한에 「2제도 2정부」를 그대로 두고 일

단 연방국가를 수립한 연후에 그 다음 연방국가내에서 상이한 2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나가자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순수한 연방제와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이 방안은 통일국가인 연방공화국 수립 후 남북교류를 실현하자는 것으로 그 선후가 전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남북 자유총선거의 절차마저도 배제하고 있다.

일곱째, 이 방안은 통일국가의 성격과 형태에 관해서는 연방공화국(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즉 남북한 두 지역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이며, 통일국가의 대외정책방향으로서 「자주·평화·비동맹(중립노선)의 독립국가」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통일방안은 더 이상의 구체적인 미래상 내지 통일국가의 모습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연방헌법 등 연방형성에 따른 구체적 절차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국호, 국가형태, 대외정책 노선을 일방적으로 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국호에 「민주」라는 용어를 삽입하여 민주국가를 표방하는 선전효과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여덟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용납하는 원칙 위에서 연방정부를 수립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연방상설회의가 정치·외교·군사권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국사를 관할한다는 것은 사실상 두 개의 지역정부의 독립적 제도와 주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홉째, 북한은 10대 시정방침을 연방제로 통일된 이후에 실시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그렇다면 이는 통일방안과는 사실상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0대 시정방침을 함께 제시한 것은 연방제방안이 구체적이고 통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선전함과 동시에 국내 통일논의 과정에 논쟁거리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끝으로, 북한은 대남혁명지침서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1975)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은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여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할데 대한 리론이다”(7면)이라며 통일방안 자체를 혁명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제5권 :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리론」(1985)에서 ‘조국통일리론’(연방제창립방안)을 소개하고 있어 연방제통일방안이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수단으로 활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결국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의 일환으로 내놓은 위장 평화통일방안인 것이다.

③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김일성이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총리 강성산의 보고형식을 통해 제시한 통일강령으로, 이 강령의 정식명칭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다. 김정일은 이 강령을 주체적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강령으로 규정하며, 조국통일3대헌장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전문과 10개 조항의 강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해야 한다.
- ②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해야 한다.
- ③ 공존·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해야 한다.
- ④ 동족 사이의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치적 논쟁을 중지하고 단결해야 한다.
- ⑤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에 대한 우려를 다 같이 없애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해야 한다.
- ⑥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 ⑦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정신적 재산을 보호해야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 ⑧ 접촉·왕래·대화를 통해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해야 한다.
- ⑨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해야 한다.
- ⑩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북한은 이 강령을 제의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외세의존정책 포기 △주한미군 철수 △외국군과의 합동군사연습 중지 △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 4개항의 요구사항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평가 >

첫째, 동 강령은 한마디로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광범위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대강을 제시한 것이다.

둘째, 동 강령의 “외세의존적 정책 포기, 주한미군 철수, 팀스피리트 훈련과 같은 합동군사연습 중지, 핵무기 철거”등의 전제조건을 보면 북한의 의도가 명백해진다. 바로 적화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미군을 축출하여 군사적 공백상태를 유도하고 적화통일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다.

셋째, 동 강령의 내용들은 새로운 대남제약이 아니라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통일원칙들을 재정리해 「강령」이라는 형태로 외피를 씌운 것에 불과하다.

넷째, 동 강령은 통일방안과 관련해 연방제 방식을 고집하는 가운데 범민련을 중심으로 한 통일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등, 「하나의 조선정책」하에서 남한혁명을 유도하기 위한 통일전선 형성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이 강령을 제의하면서 이의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7천만 겨레에 보내는 호소문」을 별도로 채택, 서신으로 한국의 정부 및 각계각층의 인사·단체들에게 발송하는 등 대남통일공세를 가속화시킨바 있다.

4) 민족대단결 5대 방침²²⁾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이란 1998년 4월 18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된 「남북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50돌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김정일이 보냈다는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라는 서한 속에 제시된 통일강령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른바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이라 불리우는 이 서한은 그간 발표된 북한(김일성)의 통일노선을 토대로 하여 김정일이 최초로 제시한 통일방침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이란 ① 민족자주원칙 견지 ② 애국애족의 기치 하에 단결 ③ 남북사이의 관계 개선 ④ 외세지배와 반통일 세력과의 투쟁 ⑤ 남북, 해외 온 민족의 연

22) 유동열 “대남전략관점에서 본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 『북한』 통권 318호(서울:북한연구소, 1998). 22-30면

대, 강화로 요약된다. 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족자주는 민족문제 해결의 핵심이며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자주독립국가가 아니라 미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사회이며, 한국정권은 미제의 식민지 대리통치정권, 친미파쇼 정권인바, 자주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선 남한 땅에서 미제를 축출하여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끝장내야 한다는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결국 자주를 내세워 남한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혁명을 용이하게 하려는 술책인 것이다.

둘째, 애국애족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 도시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와 정치인, 문화인, 종교인, 군인 할 것 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포섭하고 단합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바로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혁명전술인 「통일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은 남한혁명을 위해 혁명의 주력군(노·농·학 및 진보적 지식인)이외에 도시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 정치인, 문화인, 종교인, 군인 등 광범위한 민중들을 규합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혁명의 보조역량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란 바로 미국(외세 즉 제국주의 침략세력으로 규정)과 현 정권(친미파쇼 정권으로 규정)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일전선의 대상이 되는 세력이다.

북한의 통일전선은 그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이 특징인데, 실제 금변 5대 방침에서도 김정일은 일반 국민(하층 통일전선) 외에도 심지어 과거 민족을 배반했던 사람, 남조선 집권상층, 여야당 인사, 대자본가, 군장성들까지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통일을 바란다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포섭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광폭정치」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바로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상층 통일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임을 지적한다.

셋째, 민족대단결을 위해서는 북과 남사이의 관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선 남한당국이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내부의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는 반북대결정책을 청산하고 연북화해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여기의 연북화해정책이란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철수,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정보원(구 안기부) 해체, 통일인사 석방, 비전향장기수 송환 등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연북화해정책이란 대남혁명을 방해하는 걸림돌인 주한미군, 국가정보원(구 안기부), 국가보안법 등을 모두 제거하여 혁명을 용이하게 하자는 술책이다.

넷째, 민족대단결을 위해 외세의 지배와 간섭 및 안팎의 분열주의세력과 투쟁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외세와 결탁하는 민족반역자들의 반통일정책과 민족분열책동에 반대하여 적극 투쟁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한 분열주의세력과 민족반역자들이란 바로 미국과 한국정권을 지칭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축출과 정권타도투쟁을 고무하는 것이다.

다섯째, 민족대단결을 위해 북남·해외 온 민족이 서로 왕래, 접촉, 대화하면서 연대와 연합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남북대화는 소수 당국자들의 독점물이 되어선 안 된다며,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전민족적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통일전선차원의 주장인데, 특이한 점은 한국정부를 소수당국자 운운하며 북한의 여러 대화 상대중 하나로 격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김정일의 주장은 겉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며 한국정부를 공식적인 대화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어, 결국 민족대단결이라는 미명하에 현정부를 고립화시키려는 통일전선전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5) 낮은 단계 연방제(연방연합제 통일방안)

북한이 내세우는 연방연합제 통일방안 즉 「김정일 장군의 연방제통일론」이란 무엇인가? 이의 해답은 6.15공동선언 제2항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명시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을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이라고 표현하며, 이것이 김정일 장군의 연방제통일론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일의 연방제통일론이 김일성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계승하여 혁신(보완수정)한 것이라 칭하고 있다.

“김정일 장군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꼭 같으신 분으로 공인되고 있다. 이것은 김일성주석의 사상, 이론, 령도풍모가 그대로 김정일 장군에 의해 계승, 체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시각에서 김일성주석의 연방제에 관한 사상리론은 김정일 장군의 연방제통일론으로 계승, 혁신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장군의 연방제통일론에서 고려연방제에 관한 이론적분석과 《연방연합제》에 관한 해석을 제기하고 연구하는 것은 김정일 장군의 조국통일론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중략…특히 북조선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김대중 씨의 《공화국연합제》와의 통일지향적인 조를 제기하고 있는 《연방연합제》가 6.15남북공동선언에 중요한 합의사상으로 명기된 조건에서 《연방연합제》는 오늘의 현실에 부응한 김정일 장군의 통일방안으로서 새롭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장석,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연구, 평양출판사, 2002, 134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은 김정일 장군의 조국통일론이 견지하고 있는 통일방도의 대원칙이다. 김정일 장군께서는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국가창립방안이 민족적합의의 기초로 될 수 있는 공명정대한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으로 된다고 인정하신다. 그러면서도 김정일 장군께서는 고려연방제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어 내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연방국가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리해된다. 김정일 장군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드디어 지난해 6월의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하여 가시화되고 남북정상 합의로서 확인되었다.”

(장석,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연구, 평양출판사, 2002, 147면)



□ 연방연합 통일방안의 기본체계와 문제점

낮은 단계 연방제(연방연합 통일방안=김정일의 연방통일론)의 이의 체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안’으로 불리는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의 기본 골격은 2001년 10월 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제시 20주년 평양시보고회’에서 공식으로

등장하였다.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해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 평양시보고회, 2001.10.6)

이 방안은 종래 북한의 연방제(높은단계 연방제)와는 달리 연방정부가 행사하던 외교, 군사권도 각 지역자치정부가 행사하도록 하고, 다만 연방정부인 민족통일기구에서는 민족 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남북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미군철수 등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6.15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높은단계 연방제)으로 가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직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6.15 공동선언이 북측의 연방제안에 남측이 합의해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선전해왔는데, 대표적 사례를 들면 2001년 10월 9일 북한 로동신문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연방제로 가기 위한 잠정적 조치”라고 밝힌 데서도 확인된다.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와는 달리 이른바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에는 선결조건(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공산활동 합법화 등)이 있어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우나,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는 선결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다. 남북이 이른바 연합연방제 절충에 의해 통일을 하게 되면, 남북이 1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남한에 있는 외국군(미군)의 철수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어 미군이 철수해야 하며, 남한에서 공산당의 활동을 합법화시켜야 하고 북한정부를 고무 찬양하는 이적행위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연합연방제라는 느슨한 통일을 한 다음, 우리내부의 체제보위장치를 하나둘씩 해체하여 남한내부의 군사적 공백과 사회혼란을 조성한 다음에 남한내부의 혁명을 성사시키거

나, 북한지역정부에 의한 남한점령(남한 민주화운동 지원과 사회질서 유지 명분)으로 적화통일을 성사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결국 이는 높은단계 연방제의 달성으로 이어지며 북한 조선로동당의 전조선혁명이 달성되는 것이다. 결국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은 북한이 대남적화전전략의 ‘(위장)평화적 방도’ 일환으로 이러한 엄청난 함정이 내포되어 있다.

3.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통일의 기본철학과 관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각자의 자유와 창의, 인간존엄의 발현을 최고의 덕목으로 간주하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중심적인 이념이며 본질상 반전체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한편 북한도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인 바,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해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철학사상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겉으로는 인간중심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북한이 말하는 사람이란 모든 북한주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계급성을 띤 인민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사람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수령을 정점으로 하여 수령-당-인민대중이 일체화되어 있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속에서 이른바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 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사람을 각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 개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계급적 관념을 전제로 한 집단(전체)속의 구성원으로만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본질적으로 개인 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계급중심의 이념이라 할 수 있다.²³⁾

둘째, 통일이념에 있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와 국제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열린 민족주의」를 표명하고 있으나,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조선민족 제일주의」, 즉 반외세적·배타적·저항적 성격의 민족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셋째, 통일정책의 접근시각과 관련,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남북한의 상호실체 인정을 전

23) 주체사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도홍렬, 『김일성 주체사상 : 그 사실적 검증』 (서울 : 남북문제연구소, 1993) 참조.

제로 한 민족공동체 형성 및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제의하고 있으나,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남한의 실체부인의 논리, 즉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한 남조선 혁명과 즉각적인 국가체제의 조립을 통일방식으로 상정하고 있다.

넷째, 남북한은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으로서 각기 공동체와 연방제를 설정하고 있다. 남한은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우리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 즉 어떻게 하면 평화적인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북한은 계급·집단중심의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어떻게 권력을 배분하느냐, 즉 국가체제의 조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통일주체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민족구성원 전체를, 그에 비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서는 「조선민족」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통일방안에서 상정하는 통일주체에 있어서는 계급적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

여섯째, 통일원칙과 관련하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일곱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을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특히 통일과정과 관련하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현재의 냉전구조와 대결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점진적·평화적인 단계를 거친다는 단계적 통일과정의 필요불가결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화해와 협력의 단계」를 설정하여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발효된 남북관계의 현실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남북연합」이라는 과도체제의 설정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중간단계(잠정체제)를 생략한 연방제 통일을 지향함으로써 통일과정을 도외시하고 있다. 다만, 1991년 김일성의 신년사 발표 후부터 북한의 연방제안이 과도적 성격의 연방제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통일정책의 패러다임

공동체(남)	연방제(북)
·우리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체의 건설	·어떻게 권력을 배분하느냐 ·계급, 집단중심 ·국가체제의 조립

여덟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자체에서는 과도기구, 통일국가 수립절차를 공식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서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견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통일국가 수립절차는 비교적 합리적이고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과정을 무시함으로써 통일에 이르는 과도기구를 제시하지 않고, 다만 통일국가의 기구로서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방안은 통일국가 수립절차에 관해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개최 → 통일방안 협의·결정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선포」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최근 북한은 소위 「민족통일기구」나 「6.15민족공동위원회」나 하면서 종래의 연방제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과도적 기구와 절차를 만들어내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라고 하겠다.

아홉째, 통일국가의 형태와 관련하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단일민주공화국 수립을 궁극적인 통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국가를 통일국가 형태로 규정하고 제도통일은 후대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곧, 북한이 제의하는 연방제는 불완전한 통일을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열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민주국가 및 「열린 민족주의」의 가치를 제시하는 등 자유민주주의·복지주의·인간존중주의·국제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이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고, 통일국가의 성격 내지 정책추진방향으로 「자주·평화·비동맹 중립노선의 국가」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열한째,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 등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기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1993년 4월에 발표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남한의 민주화와 「4개 대남요구사항」²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정부의 자주성 확보 등 북한에게 유리한 통일환경 조성을 연방제 통일의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동조조건이 충족된 후의 남북연방제 실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서는 선결조건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방안이 기존의 선결조건을 반드시 철회한 것인지 여부 또한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북한이 제의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이 완전한 통일국가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는 달리 평

24) 4개 대남 요구사항은 ① 외세의존정책 포기, ② 주한미군 철수의지 표명, ③ 외국군과의 합동군사훈련 중지, ④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의 탈피 등이다.

화적 통일의 방법과 절차로서 없어서는 아니 될 전국적인 「총선거」나 「국민투표」 등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연방제안은 통일국가 건설 이전의 잠정적 체제(단결, 합작)로부터 통일국가 실현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통일국가 건설 이전의 잠정적 체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일반적·보편적 개념의 연방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한에 의한 남한의 흡수통합을 기도하는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개념의 연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상에서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각각 비교하여 보았다. 여기서는 이미 고찰한 내용을 간단히 도표화하기로 한다.

표 4. 남북한의 통일노선 비교

	한국의 통일방안	북한의 통일방안
명 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발표일	1994년 8월 15일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 발표시)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시)
형 태	1민족2국가 2정부 2체제 (남북연합단계) 1민족1국가 1정부 1체제 (통일국가 완성)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 (연방제)
통일철학	자유민주주의	주체사상
지향체제	과도적 민족공동체 - 선진자유민주국가	블록불가담적 중립국가 - 공산주의 실현
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통일과정	1단계: 화해협력 2단계: 남북연합 3단계: 통일국가 완성	외세축출 - 남한 자주적민주정권 수립 - 남북합작(연방제)
전제조건	없 음	낮은단계: 없음(정치적 물리적 장벽제거) 높은단계: 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공산당 합법화, 북미 평화협정 체결, 남한 민주정권 수립 등
중앙기구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낮은단계: 민족통일기구 (최고정상회의, 최고민족회의, 공동사무국) 높은단계: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민족연합군
중앙정부 권한	통일에 따른 법절차 준비 (통일헌법 제정 등)	낮은단계: 민족공동문제 통일조정 높은단계: 정치, 군사, 외교권 행사
지역정부 권한	정치, 군사, 외교 및 내치권 행사	낮은단계: 정치, 군사, 외교 및 내치권 행사 높은단계: 내치권 행사

IV. 재야단체의 통일론 분석

1. 재야권의 개념과 단체선정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재야권(在野圈)이란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도식화시켜 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우리 사회 정치세력의 분포상을 보면 첫째, 합법적인 틀 내에서 공개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이른바 제도권으로 여당(열린당), 야당(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및 기타 단체 등이 있고 둘째, 현행법 틀 밖에서 공개적인 또는 반(半)공개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세력들인 재야권이 있는데, 대표적인 단체로는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통일연대(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등이 있으며, 끝으로 현행법 틀 밖에서 비공개적인 지하활동을 행하고 있는 지하권 즉 NL주사파나 PD파나 트로츠키파나 하는 좌익혁명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²⁵⁾ 여기서 재야권이란 바로 합법적인 틀 밖에서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세력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재야단체의 통일론을 분석하기 위해, 각 분야별 대표적인 활동단체들을 선정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각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재야권 내에서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이중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김대중 정부시절 합법화가 되어 이제 제도권으로 분류되나, 여전히 재야권과 연대하며 활동하고 있기에 편의상 선정대상에 포함시켰다.

분석대상이 된 단체를 보면, ▶ 통일운동권 :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통일연대(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실천연대(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재야정치권 :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학생운동권 :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노동권 ;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교육계 :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청년운동 :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 ▶ 기타 : IS(국제사회주의자그룹) 등이다.

25) 유동열,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서울 : 다나, 1996), 16-17면

표 5. 재야권의 위상

제 도 권				재 야 권				지 하 권			
한 나 라 당	열 린 당	통 합 민 주 당	민 주 노 동 당	전 국 연 합	한 총 련	통 일 연 대	기 타	주 사 파	P D 파	트 로 츠키 파	기 타
공개				반(半)공개				비 공 개			
합 법				반(半)합법				비 합 법			
				운 동 권							

2. 주요 재야단체의 통일론

(1)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1990년 11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친북성향의 남북한 및 해외교포들이 모여 결성한 통일운동조직으로, 남측본부, 북측본부, 해외본부와 공동사무국을 두고 있다. 실제 범민련은 북한이 대남공작차원에서 남북한 및 해외동포를 연계하여 결성한 친북반한(親北反韓) 통일운동전선체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중 하나인 「통일전선부」가 직접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⁶⁾ 범민련(남측본부)은 국내 통일운동진영에서 가장 큰 지도력을 가진 조직으로 그동안 북한과 연대하여 범민족대회 등 각종 친북편향의 통일운동을 전개해온바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통일론은 동 단체의 강령과 규약에 잘 나타나 있다. 1993년 12월 16일에 처음 공개된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을 보면, 범민련이 북한의 통일노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범민련 초기 강령(1993.12.16 공개)

1.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그에 기초하여 전개된 강령 및 방안, 민족공동의 모든 합의를 존중하며 그를 활동의 근본지침으로 삼는다.

26) 유동열, 위의 책, 100면

2. 북과 남,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북과 남, 남과 북이 두 제도, 두 정부가 공존하는 연방국과 모든 민족성원들의 의사와 염원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건설한다.

3. 우리민족 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며 조국의 영토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북과 남, 남과 북에 호상군축을 실현하여 조선반도를 비핵 평화 지대화 한다.

4. 동족사이에 대결과 반목을 조장하는 모든 정치적 물리적 장치들을 제거하고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온 겨레의 자유로운 래왕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며 북남사이의 다방면적 협력을 실현한다.

5. 전민족적 통일을 집약하기 위하여 북과 남, 남과 북, 해외의 정당, 사회단체 및 개인들 사이의 접촉과 대화를 발전시키고 조국통일 방도를 확정하기 위한 폭넓은 대화의 마당을 마련한다.

6. 북과 남,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민족역량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으로 집결시키며 조국통일운동의 거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시킨다.

7. 우리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의 모든 평화옹호세력들과 연대를 강화 발전시킨다.

첫째, 동 강령1항을 보면, 북한의 통일3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에 입각하여 통일을 지향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2항에서는 통일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북과 남, 남과 북이 두 제도, 두 정부가 공존하는 연방국통일국가”건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북한 김일성이 1991년 신년사에서 밝힌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1997년 8월 4일 김정일이 밝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도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통일국가’ 실현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범민련의 통일방안으로 지지,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1991년 김일성신년사 중)

범민련은 2001년 9월 18일 강령을 수정하는데, 이는 ① 2000년 6.15 공동선언으로 조성된 정세를 반영하는 것이며, ② 한국내에서 범민련 남측본부가 법원판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확정된 상황에서, 범민련의 합법화를 위해 전술적으로 연방제통일 부분을 삭제하여 논란의 소지를 잠재우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범민련 수정강령(2001.9.18)

1. 역사적인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범민족적인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2. 애국과 애족의 정신에서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확고히 지켜 나가며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 아래 조국통일운동을 힘 있게 벌려 나간다.

3.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남북(북남)관계 문제와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한다.

4.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

5. 남북(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을 통해 민족적 화해와 단합, 공리와 공영을 도모한다.

6. 나라의 분열로 인하여 비롯된 남과 북(북과 남)사이의 인도주의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7.海内外 각계각층 단체들의 조국통일운동을 적극 지지 고무하고 폭넓은 연대연합을 실현 한다.

8.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 평화 애호적인 나라들과 각계각층 단체들 진보적 대중들과 적극 연대한다.

둘째, 범민련은 수정강령에서 연방제통일 명시 부분을 삭제하였으나, 범민련에서 발표한 각종 문헌에서는 강령과 달리 여전히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 선전, 채택하며, 반면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을 부정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가 2001년 5월 13일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시작되었다>라는 문건을 보면, 6.15 공동선언은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공동선언 2항(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단계 연방제 절충)을 사실상 북한의 연

방제안에 대한 동의라고 해석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의 국가연합 제안을 분단고착화방안이라고 매도하며, 일방적으로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시작되었다.

…중략…

5개항으로 이루어진 공동선언은 그 면면을 살펴보면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길로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뗀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선언의 기초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다….

2항에서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사실상 연방제안에 대한 동의라고 볼 수 있다…중략…이는 남측에서 그 동안 금기시 되었던 연방제 통일방안이 합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고 해서 탄압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남 당국의 기본 통일방안인 국가연합제를 연방제로 끌어 당겼다는 것이다

…중략…

국가연합제는 사실상 통일방안이 아니라 분단고착화 방안이다…분단고착화 방안을 통일을 지향하는 방안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2항은 사실상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한 합의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2항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라고 볼 수 있다. 연합제는 아무리 '나라의 통일을 위한'의 전제를 달고 '국가'를 뺀 연합제라 할지라도 조국통일을 위한 올바른 방안이 아니다. 그 이유는 연합제안은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이 전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방안은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시작되었다, 2001. 5.13)

셋째, 범민련 남측본부가 결성 15돌을 맞이하여, 발표한 <범민련운동의 정치적 성과와 6.15시대 범민련의 과제>²⁷⁾(2005.11.29)를 보면, 범민련의 출범부터 이른바 6.15시대에 이

27)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의 진로』 2005년 12월호 통권 68호 수록

발표되면서 범민련은 『변화된 오늘의 새로운 정세는 나라의 통일은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진정으로 조국통일을 바라는 모든 애국역량이 함께 연대하여 전민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2003년 1월 24일 범민련 임시 공동의장단 기초보고에서는 『6.15공동선언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민족이 변함없이 들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영원한 기치입니다. 범민련조직들은 올해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을 천명하여, 반동화되는 내외정세를 6.15공동선언의 위력으로 돌파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2004년 범민련은 <우리 민족제일주의 기치 아래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는 구호아래 범민련 안팎으로 민족성과 주체성 그리고 민족공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또 결정서에서 『범민련은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의 기발을 높이 들고나가자!》는 구호를 올해 통일운동의 기본구호로 추켜들고 3대공조 실현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6.15공동위원회에서 범민련이 그렇게 내용을 세우고 활동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뿐이겠는가 6.15공동선언이 실현되는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경로에서부터 연방통일정부의 시책에 이르기까지, 참가하든 관망하든 대중들의 곁에서 그에 맞게 해설하고 민족대업의 희망을 공유하고 민족 구성원들이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운동의 정치적 성과와 6.15시대 범민련의 과제, 2005.11.29)

또한 1993년 이래 매년 초 개최되는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에서 발표되는 공식문건을 보면, 범민련이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 5월 29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시 합의한 당면투쟁과업을 보면 “미군과 핵무기를 남녘에서 철수시키고 외국군대와외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시키며 남조선 당국이 외세의존적 정책을 포기하고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도록 하기위한 반외세자주화운동을 힘 있게 벌이며 특히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북에 대한 근거 없는 핵 소동과 유엔을 통한 제재 압력책동을 분쇄하고…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과 안기부, 기무사, 대화창구일원화와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고…”(제1차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 결의문, 1993.5.30)라고 밝히고 있어, 북한이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대남노선을 일방적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2월 23일 개최된 범민련 임시 공동의장단회의의 기초보고문인 <2007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활동방향에 대하여>를 보면, 범민련은 ① 북한이 2006년 조국통일구호로 제시한 ‘3대 애국운동’(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운동)을 수행해왔음을 천명하고 ② 반미반보수투쟁을 주된 투쟁과업으로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한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였다고 밝히고 ③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④ 2007년 북한이 제시한 조국통일구호인 ‘3대 과업(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실현’의 위

해 투쟁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의 통일노선을 그대로 수용하며, 채택하는 것임을 확인해준다.

범민련은 올해에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3대과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 사명과 역할을 다해 나감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범민련, 임시 공동의장단회의의 기초보고문: 2007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중)



이상에서 보듯이, 범민련 남측본부는 수정강령에서 연방제 통일부분을 삭제하며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통일을 하겠다고 밝히며 자신들의 통일방안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방안’이라 선전하고 있으나 결국은 일방적으로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채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약칭 전국연합)은 1991년 12월 1일 재야운동권의 13개 부문 단체와 12개 지역단체가 참여하여 결성되었다. 2007년 6월 현재에는 8개 부문단체,²⁸⁾ 12개

28)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반미여성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총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자주 평화통일, 통일중앙회의, 사월혁명회

지역연합,²⁹⁾ 9개 참관단체³⁰⁾가 가입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재야운동체이다.

□ 전국연합의 전문-강령(2002.3.2 개정)

〈전문〉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민족자주권을 확립하고,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구현하며, 번영된 범민족 통일 국가수립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기필코 완수할 것을 천명한다.

〈강령〉 민족민주운동의 투쟁의 구심이자 정치적 대표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각계각층민중들의 총단결에 기초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령을 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1. 자주민주통일 실현의 정치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친미예속성을 타파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1) 자주적 민주정부는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고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며 자주적 통일국가 건설의 굳건한 기반을 마련한다.

2) 자주적 민주정부는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각계 각층, 정당, 사회단체, 개인을 망라하여 구성한다.

3)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 정책에 협력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과거를 불문하고 최대한 포용한다. …중략…

8. 민족 자주권의 생명선을 지키기 위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한다.

1)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군 작전권을 회수하며 미국 등 외국과 맺은 불평등한 군사협정을 폐기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모든 기지와 시설을 국민을 위한 시설로 전환한다.

2) 한반도를 비핵지대화 하고 모든 형태의 핵무기 사용이나 이를 위한 훈련을 반대한다.

3) 남북의 군사력을 민족 보위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대폭 감군 하고 절감된 비용을 국민의 생활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29) 서울연합, 인천연합, 경기남부연합, 경기동부연합, 대전충남연합, 대구경북연합, 광주전남연합, 전주완주연합, 서부경남연합, 울산연합, 부산연합, 김제민주연합

30)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운동연합, 전국불교운동연합, 한국노동운동협의회, 자주민주통일민주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9. 분단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1) 7·4남북공동성명에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6·15공동선언에 따라 통일을 추진한다.

2) 전 민족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남북정치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3) 남북의 제도적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제도'에 입각하여 통일한다.(전국연합, 2001년 통일일꾼 수련회자료집, 2001, 4면)

전국연합의 통일강령(강령9항)을 보면, 북한의 통일노선을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통일3원칙인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6.15 공동선언의 이행으로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북한의 조국통일노선을 수용하는 것이다.

여기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북한의 통일 3원칙인데(대한민국의 통일3원칙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임), 이 원칙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성명' 등에서 우리정부가 합의해준 바 있으나 문제는 각 원칙을 해석하는 관점이 남북한 간에 서로 상이하다는 점이다. 전국연합이 발간한 각종 문건을 보면 이 3원칙을 북한당국의 입장과 일치하는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다.

둘째, 강령9항의 3에서 “남북의 제도적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제도'에 입각하여 통일”한다고 밝힌 부분은 바로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상징하는 것으로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것이다”(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8.4, 22면)

셋째, 전국연합은 <2001년 통일일꾼수련회자료집>을 보면, 동 단체가 북한의 연방제통일

노선을 그대로 수용, 채택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2.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믿음직한 견인차, 명실상부한 민족 민주전선 건설이라는 웅대한 포부와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전진하자!! 전국연합은 상반기 조국통일 투쟁의 과정에서 연방통일조국 건설과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해 나가는 조직적 무기인 강력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토대를 획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전국연합, 2001년, 통일일꾼수련회자료집, 2001, 4면)

(3) 통일연대

통일연대(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2001년 3월 15일 ‘6.15공동선언 실현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치를 들고 결성된 재야통일전선체로, 전국연합, 민주노총, 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 등 현재 47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통일연대는 결성선언문과 규약전문에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계승하여 통일하겠다고 밝혀, 북한의 통일3원칙에 입각한 통일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조국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절절한 염원을 안고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의 결성을 7천만 겨레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우리 민족은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6.15남북공동선언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계승하여, 우리 민족의 힘과 지혜로 통일의 문을 열어갈 것을 만천하에 천명한 민족 공동의 통일대장전이다

...중략...

우리는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 미국의 방해와 압력에 굴종하는 정부당국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반세기만에 맞이한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7천만 겨레의 힘과 지혜를 시급히 모아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을 자각한다.

...중략...

우리 모두 6.15공동선언을 반드시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민족대행진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서자”

(통일연대, 2001.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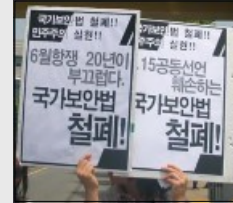
여기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북한의 통일 3원칙인데(대한민국의 통일3원칙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임), 문제는 통일연대가 각 원칙을 북한측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통일연대는 자주(반미자주화투쟁), 민주(반파쇼민주화투쟁 :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 통일(연방제조국통일투쟁) 등 북한의 대남투쟁노선을 여과 없이 수용하여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3년은 세계적으로도 민족내적으로도 미국의 강도 높은 침략정책과의 투쟁으로 시작되었고, 마감되었다. 2004년 정세 또한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에서 전쟁이나 평화냐, 민족공조이나 외세공조냐, 친미 반통일 세력의 몰락이나 득세냐를 놓고 민족자주역량과 내외 반통일 세력간의 치열한 격돌이 전개 될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을 놓고 겨루는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은 군사적 대결과 정치사상적 대결, 외교적 대결 등을 포함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격돌이다…중략…2004년 통일연대와 통일운동단체들은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개척하자’는 구호를 전면에 걸고 한반도의 대결구도를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구도로 전면시켜 반미자주화투쟁과 조국통일투쟁에서 일대전진을 이루어야 한다. 다가오는 2005년은 조국광복 60돌, 분단 60년이 되는 역사적 해이다. 분단 50년을 통일원년으로 만들자는 민족적 결의를 세운지도 10년이 훌쩍 지났다. 더 이상 분단의 고통을 지속시키며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없다는 것은 온 겨레의 드높은 의지이다. 조국광복 60돌, 민족분단 60년인 2005년을 ‘자주통일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결의로 2004년 투쟁의 기세를 더욱 높여 가야 한다.

- 1)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의 가치를 철저히 고수하고 우리민족제일주의의 핵심인 민족자주의식과 민족대단결의식을 고취하는 정치선전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한다.
 - 2) 대중적 반미자주화·반전평화 투쟁을 더욱 가속화하여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한반도 전쟁책동에 결정적 파열구를 낸다.
 - 3) 남북사이 교류와 협력, 연대와 연합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민족공조로 6.15공동선언의 실질적인 이행을 이룬다.
 - 4) 사대매국집단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철폐 등 사회민주화를 촉진하는 투쟁을 반미자주화 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전개한다.
- (통일연대 사업방향 중)

- 6·15민족통일대축전 성사하여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기도 막아내자.
- 7천만 전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6·15민족통일대축전 반드시 성사시키자.
- 6.15공동선언 기치높이 민족통일대축전 성사하자.

- 범민련, 한총련의 참가보장, 공동선언 정신대로 민족통일대축전 성사하자.



- 미국반대 전쟁반대 평화수호의 의지를 6·15민족통일대축전 성사로 모아내자.

- 미국반대 전쟁반대 민족대단결!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통일대축전을 맞이하자.

- 동족을 주적이라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민족대단결 실현하자.

- 한총련, 범민련 합법화로 민족대단결 실현하자.

-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는 이회창과 한나라당 규탄한다.

- 6.15공동선언 폐기발언 웬말이나. 이회창을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하자.

-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하여 6.15공동선언 실현하자.

- 6.15공동선언 실현하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자.

- 민족의 통일이정표 6.15공동선언을 고수, 이행하자.

(통일연대, 민족통일대축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일선 일꾼들을 위한 교양자료 중, 2002.6.7)

셋째, 통일연대는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을 ‘통일 불가능을 전제하는 방안’, ‘한반도의 전쟁을 일상화하는 분단고착화방안’으로 매도하며, 북한측 연방제통일방안에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연대의 주장들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방안을 부정하고 북한의 통일노선을 정당화하며 지지, 채택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합제안은 더 정확히 말해 국가연합안으로, ① 분단은 체제의 차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남면이 사회주의화되던가 북이 자본주의화되기 이전에는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생각. ② 체제의 차이로 인하여 한반도는 늘 전쟁의 불안이 감돌고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체제의 차이를 국가간의 차이로 인정하고 그에 기초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 즉 통일은 불가능하니 평화체제라도 수립하여 보자는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연방제안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볼 때 기본 전제부터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분단은 애초에 체제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분단은 미군의 남한 강점과 남

한만의 단독정부수립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1948년 대표적인 반공주의자였던 김구선생님을 포함한 남북의 모든 제정당 사회대표들이 평양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며 통일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일치한 견해를 발표하였던 것으로부터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체제가 달라도 통일할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체제의 차이를 존중하고 통일하자는 연방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한반도의 전쟁불안은 체제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남한에 주둔하는 미군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즉 전쟁발발요소가 남북의 체제차이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수립하는 근본방도는 미군이 철수하고 한반도에 자주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미군이 주둔하는 조건에서 근본적인 평화란 상상할 수 없다. 즉 한반도에서 통일의 과제와 평화의 과제는 분리되어 실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맞물린 하나의 과제이다.

③그러므로 국가연합제안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이 아니라 사실상 통일불가능을 전제로 하여 한반도에 전쟁과 불안의 요소를 일상화하는 근본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견해이다

(통일연대, 민족통일대축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일선 일꾼들을 위한 교양자료 중, 2002.6.7)

(4) 실천연대

실천연대(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한다는 기치 하에 2000년 10월 21일 결성된 재야통일운동체로, 현재 6개의 지역조직(서울, 광주전남, 경기, 대전, 부산, 충남)과 8개 단체³¹⁾가 가입하고 있다.

실천연대는 강령규약과 각종 발간물을 통해,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통일방안>과 이의 집약체인 <조국통일 3대 헌장>을 미화찬양하는 등 북한의 통일노선을 수용하고 지지하고 있다. 특히 실천연대는 길으로는 6.15 공동정신을 살린다고 하면서 남북한이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절충’에 합의하고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의 연방제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상징하는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통일’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의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통일’이란 김일성이 1991년-1994년 신년사에서 매년 강조한 것으로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의미하는 것이다.

31) 한총련, 김양무열사정신계승사업회, 미군철수운동본부, 미술패 그림농장, 노래패 우리나라, 인터넷방송국 청춘, 가극단 미래, 박성환 밴드

“남북 어느 일방의 체제통일 흡수통일을 배격하는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통일은 남북의 공존 공리 공영을 보장하고 통일비용을 한 푼도 들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계급계층에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주는 유일한 통일방안으로서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한다”

(실천연대 출범선언문 中, 2000.10.21.)

“6.15정신을 살려 남북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 연합하여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는 길은 하나의 민족에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지역의 정부 즉 1.1.2.2에 따른 연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실천연대, 2001년 구국운동의 과제, 3면, 2001. 1.31)

<연방제통일 주장하는 북한주장>

“우리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방도와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 하나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갈 것이다…이것은 우리민족이 55년간의 통일운동 과정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이며 연방제 통일로 나가는 역사적인 이정표로 된다. … 우리는 북과 남, 해외에서 통일논의를 활발히 벌여 온 민족의 의사를 모아 나감으로써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북남 공동선언 지지환영 및 실천을 위한 공화국 정부 정당단체 연합대회’ 결의문 2항, 2000년 8월 15일)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6.15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며…중략… 연방제통일방안이야말로 민족의 의사와 이익,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조국통일을 가장 빠르고 쉽게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통일의 방도로 되는 것이다…중략… 6.15 북남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연방제통일을 지향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민족자주통일은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 2002년 2월 5일자 평양방송 논설)

둘째, 실천연대는 북한당국의 통일방침을 집약한 ‘조국통일 3대 헌장’을 미화 찬양하는 등 북한의 통일노선을 수용하고 있다. 실천연대는 북한의 통일방침인 조국통일 3대헌장을 지지

하며 정당화하고 있는데, 조국통일 3대헌장이란 북한 김일성이 그간 제안한 통일노선을 집약한 것으로 ①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1972) ②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980) ③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1993)을 지칭하며 이는 김정일이 1997년 8월 4일 발표한 논문(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명명된바 있다.

“조국통일 3대헌장이 그대로 구현된 민족자주 조국통일선언인 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4천만 민중에게 널리 합의 확산시켜 남북공동선언의 지지동조자 대열을 확대해 거스를 수 없는 공동선언 이행정국, 조국통일정국을 만든다.” - 남북공동선언의 구체적 실천과제 (국보철, 주미철, 북미평협 체결, 연방제실현, 반통일세력 고립분쇄) (실천연대, 2000년 11-12월 사업계획, 2면, 2000.11.13)

셋째, 실천연대는 북한이 매년초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하는 ‘조국통일운동구호’를 그대로 수용하여, 동 단체의 통일구호로 설정하고 이의 투쟁을 실천해오고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2007년 북한이 설정한 조국통일구호인 ‘3대 과업’(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실천연대가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로 설정하고 조국통일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아가야 한다. 올해 자주통일의 정세는 매우 밝다. 미국과 반 통일세력의 분단 음모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자주통일의 전성기를 펼쳐나아가야 한다.
(실천연대, 2007년 총노선, 2007.1, 15면)

넷째, 실천연대는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국가연합제안)으로는 통일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고, 이를 부정하고 연방제통일국가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통일의 경로는 연합연방단계를 통해 낮은단계의 연방제로 그리고 보다 높은단계의 연방제로 나아가 중국에는 연방제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연합방식은 통일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연합방식으로는 통일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실천연대, 남과 북의 통일방안 어떻게 수립될 것인가, 정세동향자료집 23호, 39면,

2002. 3.1)

다섯째, 실천연대는 북한의 대남투쟁 3대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과 이에 입각한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주한미군철폐’ 등을 내세우며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실천연대가 북한의 통일노선을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이제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한 총진군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주한미군철폐는 자주, 민주, 통일의 선차적, 중핵적 과제이다. 미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코 자주정권을 수립할 수 없으며 조국의 평화통일도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당면 투쟁을 미군철폐로 확고히 지향시켜 현재 조성된 유리한 정세를 조국통일과 미군철폐로 발전시켜야 한다.

(실천연대, 2007년 여름 반미반전전국일꾼 전진대회자료집, 2007. 58면)

(5) 한총련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1993년 5월 27일에 고려대학교에서 전국 186개 대학이 참가하여 결성한 국내 최대의 한생운동단체이다.³²⁾

한총련은 결성 이후 일관되게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고 이를 선전해왔다. 한총련은 1993년 4월 창립대의원대회시 ‘연방제’를 공식 통일방안으로 채택하고, 1994년 4월 제2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시 이를 강령으로 채택하였으며, 1996년 4기 한총련 시에는 ‘한총련 통일일꾼 전진대회’(4.13-14, 동국대)를 개최하고 동 자료집에 북한의 통일3원칙과 연방제 통일방안을 그대로 수용한 한총련의 통일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록하였다.³³⁾ 이 자료집의 내용은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이후 한총련은 일관되게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해 왔는데, 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총련은 강령을 통해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지지해 왔다. 제1~8기까지 강령에서는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한다”라고 연방제통일 강령을 명시하였으나, 9기에는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일강령으로 틀어쥐고 2000년 가

32) 한총련의 실제 태동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한총련이 갑자기 결성된 조직이 아니라, 1987년 8월 19일 충남대에서 결성된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 6기 전대협 시절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한총련이 결성되었기 때문이다.

33) 국가안전기획부, 제4기 한총련의 실제(서울 : 국가안전기획부, 1996), 15-21면

까운 앞날에 조국을 통일한다”라고 개정하면서 연방제통일강령을 삭제하였다. 또한 2003년 하반기 강령개정안에서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범민족적 통일국가를 수립한다”고 명시하여 연방제강령을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총련은 강령에서만 ‘연방제 통일’부분을 삭제했을 뿐, 여전히 한총련 명의의 각종 발간물에서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는바, 한총련이 연방제통일노선을 폐기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9~13기 때에는 의도적으로 연방제 통일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었으나, 14기부터는 노골적으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14기 한총련은 이전과는 달리 연방제통일 조국 건설이 한총련의 당면 목표임을 표방하고, 연방제통일투쟁 지지, 관철에 매진하고 있다.

표 6. 한총련 통일강령의 변화

	한총련의 통일강령 (강령3항)	
1기-8기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한다”	연방제 명시
9기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일강령으로 틀어쥐고 2000년 가까운 앞날에 조국을 통일한다”	연방제 삭제
10-15기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아래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범민족적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연방제 삭제

둘째, 한총련은 총노선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연방통일 조국건설’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면, 올해 대선정국에서 낮은단계 연방제 진입 발판 마련과 2008년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목표로 투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남북연합안)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정당화하고 지지, 선전하는 것이다.

“2006년 정세는 학생운동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전 민족은 2005년 마련한 승리의 기초 위에서 2006년 전면적 공세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단결한 우리 민족은 분단 60년이 된 지난해를 자주통일의 새로운 단계를 연 역사

적 해로 빛냈다.

…중략…

올해 우리 민족은 이 새로운 단계를 더욱 활력 있게 전진시켜 2007년과 2008년으로 이어지는 자주통일의 결정적 시기를 승리로 결속지어야 한다.

…중략…

모든 것을 연방통일 조국 건설을 위해! 자주통일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이자!

…중략…

따라서 우리는 자주통일이라는 원대한 포부와 신심을 안고 ‘모든 것을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해 시작하는 이 전면적 공세는 2007년, 2008년 자주통일, 연방통일조국이 건설될 때까지 전개될 것이며 3년의 전망을 가지고 이 해의 운동을 기획할 때 올해는 승리의 확고한 토대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4기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2006.2, 45-46면)

“이제 우리의 당면한 총적목표는 연방통일조국 건설! 2007년 통일조국을 건설할 정권 수립! 2008년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정치적 환경을 완비! 이제 우리의 당면목표는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다. 모든 것을 3-4년 안에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목표에 복무시켜야 한다. 이것은 하면 좋고 안 되면 다음 기회에 다시 하면 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비단 역사적 분수령의 시기 반변혁의 공세를 허용하게 되면 그 이상의 퇴보를 낳을 수 있다는 역사의 엄중한 교훈 때문만은 아니다…중략…

만난을 뚫고 3-4년 안에 연방통일조국을 기어이 실현해내겠다는 포부로 한껏 무장할 때이다. 이 물리칠 수 없는 싸움에서 모든 것을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복무시키고, 모든 걸음을 ‘우리 민족끼리’의 전민족 행군을 보장하며 내딛어야 한다. …중략…

2007년은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할 정권을 수립해야 할 해이다. 향후 3-4년의 결정적 국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2007년 대선이다. 6.15 공동선언 2항에 명시된 연방연합제 방식의 통일은 결국 남과 북의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일이냐 반통일이냐는 통일애국세력을 대표하는 통일실현 정권이냐,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친미극우정권이냐에 의해 결정적으로 갈라진다는 것이다. 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통일애국의 모든 역량을 2007년 대선을 계기로 통일을 이룩한 남측의 정권을 세우는 데로 총집중시켜야 한다. 그런데 통일을 이룰 정권을 세우는 것은 비단 정권 상층부를 누구로 세우는가 하는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다. 6.15 공동위를 중심으로 통일에

국세력이 조직적으로 중단결하여 미국의 정치적 압력을 국민대중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대중적 토대와 역량이 갖춰지는 것이 선차적이다. 정권이라는 것도 결국 대중적 토대와 분출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007년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실현할 정권을 세우려면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단결된 강위력하고 광범위한 대중적 조직적 역량을 축성하는 것이 기본으로 된다. 2008년은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정치적 환경을 완비해야 할 해이다. 2008년으로 예정된 총선 일정은 통일정부 수립의 안정적 정치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14기 한총련 중앙위원회, 총노선 최종안, 2006.3)

“제15기 한총련 대중노선 1.총적방향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반미반전,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을 대중적으로 펼쳐내고 반보수대연합 형성으로 대선에서 기필코 승리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에 유리한 정치지형 창출하여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자!”

(제15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 2007.2.10. 40-41면)

셋째, 한총련은 《통일일꾼수련회 자료집》(2006.8)의 ‘조국통일이론’편을 통해 북한의 통일방침을 집약한 ‘조국통일 3대헌장’(①조국통일 3대원칙 ②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③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의 유일한 초석이며 헌장이라고 지지, 찬양하며,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통일노선을 정면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고무, 찬양하는 주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함에 있어 반드시 지키고 의거해야 할 통일의 헌장은 무엇인가?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연방제 통일방안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된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다. ..중략..

조국통일3대헌장은 통일투쟁과정에서 이룩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인과 방도를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과학적 이론이다 ... 따라서 3대 헌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또한 남북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14기 한총련, “조국통일이론”, 통일일꾼수련회자료집, 2006.8, 2-4면)

넷째, 북한이 매년 1월 한총련의 통일구호로 설정하고 있다. 한총련은 북한이 2007년 1월 1일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에서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구호로 설정한 “올해 온겨레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 통일시대를 빛 내어 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한총련의 통일구호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통일노선을 정당화하고 고무, 선전하는 것이다.

“올해 청년학생의 임무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과업 수행의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중략… 3대 과업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전 민족적으로 벌여나가자는 것이니만큼 일꾼들만이 기수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청년학생들이 3대 과업 수행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07년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 과업 수행으로 6.15 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라는 구호를 들고 기수로서 그 임무와 역할을 다하여 나갑시다.”

(제15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2007.2.10, 38-39면)

“2006년 2. 한총련의 임무와 역할, 각오. 한총련이 앞장에서 올해를 3대 애국운동의 해, 학생운동 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빛내이자. 한총련은 3대 애국운동의 기수가 되자! 한총련의 제1임무는 3대 애국운동을 앞장에서 벌여나가는 것이다. 2006년 민족운명은 3대 애국운동에 달려 있다. 가장 활력 있고, 가장 투쟁적인 것도 한총련 청년학생이고 미래사회를 떠맡아나갈 주인도 청년학생들이다. 청년학생들은 3대 애국운동을 떠밀고 나가는데서 주력부대다워야 한다. 자주민주통일 투쟁의 선봉장인 한총련이 올해에도 3대 애국운동의 기수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14기 한총련, 한총련 총노선 최종, 2006.3.2., 15면)

표 7. 북한의 조국통일구호와 한총련의 통일구호

	북 한	한 총 련	
	신년공동사설 (매년 1월1일)	한총련 대의원대회자료집 (매년 총노선 발표시)	
2002년	우리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우리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10기 한총련
2003년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11기
2004년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 높이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개척하자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 높이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개척하자	12기
2005년	3대 민족공조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3대 민족공조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13기
2006년	3대 애국운동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14기
2007년	3대 과업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 과업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15기

다섯째, 한총련이 상급조직으로 받고 있는 「범청학련」(조국통일범청년학생연합)의 강령과 규약에서 연방제통일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북한의 통일방침인 ‘조국통일 3대헌장’을 조국통일강령으로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총련은 범청학련의 남한지역 조직인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구성체³⁴⁾라는 점으로 볼 때, 한총련이 연방제통일 강령을 수용, 승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령1. 조국통일 3대헌장의 정신이 구현된 6.15 남북공동선언을 범청학련의 통일운동 강령으로 틀어쥐고 200년대 가까운 앞날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중략...
규약 제1조 범청학련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범청학련의 강령과 규

34)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은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중 하나인 ‘통일전선부’가 조종하는 친북반한 통일전선체로 1992년 8월 15일 결성완료하였는데, 북측본부(조선학생위, 청년동맹), 남측본부(한총련), 해외본부와 공동사무국으로 구성되어있다.(유동열,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134-141면)

약을 승인하는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의 학생조직 및 청년조직을 망라하는 전민족적인 청년학생통일운동연합이다 ...중략...

제3조 범청학련은 7.4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강령, 연방통일국가창립방안의 조국통일 3대헌장을 지침으로 삼는다. ...”

(범청학련 강령과 규약)

“범청학련은 북의 조선학생위원회,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해외의 청년조직과 학생, 남의 한총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한총련으로 구성되어 조국통일투쟁에서 온몸을 내던지며 조국통일투쟁을 가장 앞서서 이끌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10기 한총련, 2002년 한총련 조국통일운동 방향에 대하여, 13면)

(6) 민주노총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991년 11월 11일 전국 866개 노조(41만여 명의 조합원)가 가입하여 결성된 노동운동조직이다. 2006년 말 629개 노조, 752,363명의 조합원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발전한 노동운동단체로 한국노총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노총의 통일관과 통일방안은 ≪7.4남북공동성명 35돌 기념 노동자통일대토론회자료집≫(2007.7.3)과 2000년 12월 11~14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6.15남북공동선언 지지관철을 위한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의 민주노총 발제문≫(2000.12)에 잘 집약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연합제안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 채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6.15 공동선언 이후 타 재야단체들이 궁극적으로는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하면서도 겉으로는 ‘연합-연방제 절충’에 의한 통일을 내세우고 있는 것과 달리 당당하게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민주노총은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으로 북한의 통일3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이 3원칙은 남북이 합의한 통일원칙에는 분명하나 문제는 각 원칙에 대한 해석이 남과 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인데, 민주노총은 각 원칙을 북한측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자주원칙을 주한미군 철수로, 평화통일원칙을 군사훈련 중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민족대단결 원칙을 국가보안법 철폐 등으로 연결시키며, 이의 투쟁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이미 남과 북이 합의하여 온 세계에 공표한 조국통일 3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72년 7.4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입니다. 이는 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도 기본적인 정신과 원칙으로 재확인되고 있습니다.…중략…

이에 우리는 오늘의 뜻 깊은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를 계기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온전히 구현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의 정당성과 노동자통일운동의 당면과제들을 분명히 확인해 두고자 합니다.…중략…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자주 원칙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남측의 자주적인 민간통일단체들은 하나같이 주한 미군철수와 일본군국주의 부활저지를 당면 주요 투쟁과제로 제기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중략…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며 과도한 군사적 긴장으로 몰아가는 이 같은 침략적 군사훈련이나 작전계획은 반드시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중략…

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 북미간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중략…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고 민족의 일부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대립과 적대 의식을 재생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 평화통일방안 노동자 대토론회자료집, 2007.7.3. 44-47면)



둘째, 민주노총은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즉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통일’의 실현을 주장하며, 연방제통일방안을 ‘남과 북이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공존공영하며 하나의 나

라로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지지, 찬양하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국가연합제안)을 분단고착화방안이라 운운하며 전면 부정하고 있다. 여기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통일’이란 김일성이 1991~1994년 신년사에서 매년 강조한 것으로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합의, 확산시키자는 기존 통일운동단체들의 주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체제, 두개의 정부”라는 구호로 압축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는 남과 북의 현 체제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남북에 각각의 지역정부를 두고 남북 동수로 구성된 중앙정부를 세워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중략…

국가연합 방식의 통일은 남북이 두 개의 나라로 고착되고 대립하게 되어 외세의 개입을 용인하게 됨으로써 자주적 원칙을 훼손하게 되며, 상호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흡수통일은 결국 전쟁을 불러일으켜 평화의 원칙을 훼손하게 되고, 국가연합이나 흡수통일은 공히 특정 사상과 체제를 서로 배제하거나 무너뜨리려는 방식임으로 민족 대단결을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연방제 방식의 통일방안만이 민족의 자주를 지키고 전쟁의 참화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어내는 통일을 담보해 준다. …중략…

그런데 국가연합방식의 통일방안은 일단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체제를 국가적 차원으로 고착화시키자는 주장이므로 그 반통일성을 감추기 위해 총선거를 통한 체제통합 일정을 미리 확정짓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이미 반세기 동안이나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 온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은 ‘하나의 나라’로의 통일을 유보하자면서도 ‘하나의 체제’로까지의 통합을 미리 확정짓자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되는 견해이다. 한편 흡수통일 방안은 민족 공멸의 무력충돌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방안으로, 검토조차 할 필요가 없는 반민족적이며 위험적인 발상인 것이므로 이를 통일 방안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붙여서도 안 되는 방안이다…

바로 이와 같은 근거들 때문에 연방제 통일방안이야말로 하나의 나라로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통일방안이 된다.

(민주노총, 평화통일방안노동자대토론회자료집, 2007.7.3.6-8면)

“우리 노동자와 민중들을 포함한 남북해외의 애국동포들은 그동안 조국통일 3대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어 있고, 상호 체제와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의 나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통일방안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합의, 확산해 왔습니

다. 남북 어느 일방의 체제로 흡수하거나 두 개의 나라로 아예 합법적으로 분리하자는 국가연합제 방식의 통일방안은 분단을 기정사실화하고 분단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결코 올바른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백히 반대의 입장을 취해왔던 것입니다. …중략…

남한사회의 민중들의 자주적인 결사의 역량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체인 민주노총의 통일방안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남한사회, 나아가 우리겨레 노동계급의 통일방안을 대변해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처지와 역할에 따라 갖게 된 민주노총의 통일방안의 취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노동해방의 전망을 유지하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즉, 이미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여 살고 있는 북녘동포들의 체제를 존중하되, 동시에 오랫동안 세계유일패권의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 온 남녘 동포들의 처지와 조건, 전쟁경험, 분단 및 사회양극화 고통의 가중 등을 감안하여 하루빨리 분단의 고통을 끝장내고 하나의 나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통일방안은 서로 현재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연방제 통일’ 방식밖에 없다는 노동계급다운 단순 명쾌한 대중적 인식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일단 두 개의 나라로 분단을 합법화하자는 어불성설인 국가연합 방식에 동조할 수는 더 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실로 연방제 통일방안 이외에는 그 어떤 통일 방안도 평화적인 통일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는 없었기에, 민주노총은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했지만 일단 연방제 통일방안을 자신의 평화통일방안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중략…

우리 노동자민중들의 자주적인 평화통일방안인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대중적 합의, 확산이 보다 빠르게 추진되어 나가야 합니다.

(민주노총, 평화통일방안 노동자 대 토론회 자료집, 2007.7.3. 6-8면)

셋째, 민주노총은 연방제통일을 위한 당면 투쟁과제로 “국가보안법 철폐,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한미동맹 파기,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의 선결조건과 일치하는 주장으로 결국 북한당국의 통일노선을 여과 없이 수용하여 정당화하는 것이다.

6.15통일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만큼, 시대의 요구와는 도무지 맞지 않는 분단대결시대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하고, 정전협정은 평화협

정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한미예속동맹은 폐기되어 통일조국과의 호혜평등한 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하고, 유엔사는 해체되고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민족끼리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당면 과제가 보다 분명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되 공통점은 확대해 나가면서 서로 돕는 통일 상생의 과정들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략...

북미 간에 사활을 건 치열한 대결의 결과, 북미관계정상화의 전제인 정전협정폐기와 평화협정체결이 목전에 펼쳐지게 된 오늘, 6.15공동선언에 기초한 연방제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노동자민중들의 당면 투쟁과제는 그 모든 것의 걸림돌인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입니다.

(민주노총, 평화통일방안 노동자 대 토론회 자료집, 2007.7.3. 9면)

(7) 전교조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89년 5월 28일 ‘참교육’의 기치 아래 “교육의 민주화와 사회민주화,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교육”을 목표로 결성된 전국 교사들의 단체이다.

전교조는 공식적으로 통일방안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아래의 문헌을 통해 전교조의 통일관을 가늠할 수 있다. 전교조의 통일관과 통일노선은 전교조가 발간한 ≪이겨레 살리는 통일≫(2001년)과 2007년 7월 3일 개최된 ≪7.4남북공동성명 35돌 기념 노동자통일대토론회자료집≫에 잘 집약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 채택하고 있다.

전교조 참교육실천위원회가 발간한 ≪남북화해시대 통일교육자료집≫(2000.8.25)에서는 서두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북한시인 오영제의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2000.8.15)를 수록하며 “7천만이 다 함께 모여 살 집을 지읍시다. 우리의 집을 지읍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란 큰집을 세웁시다”라고 선전하고 있다.

□ 사례 : 전교조 인천지부 통일국, 통일자료집(2001, 14-15면)

6·15 공동선언 이행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환영을 위한
통일 자료집



전교조 인천지부 통일국

주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답방		
목표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의 의의를 알고 이를 환영하는 태도를 갖는다.		
준비물	·학습지1 ·A4용지 여러 장, 색종이, 가위, 풀, 깃대(또는 나무젓가락 여러 개), 셀로판테이프	시간	60분
학습 단계	학습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1년전 6월의 남북정상회담 동영상 자료 -감격의 순간 - www.knews.kbs.co.kr → 남북정상회담 동영상 보기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과 의의 다시 생각해 보기 ·학습목표확인 -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의 의의를 알고 이를 환영 하는 태도를 갖는다.		·6월13일 뉴스 중 백화원 초대소 도착 모습
전개	▶ 작년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답방했을 때 평양 시민의 모습 알아보기 ·55년만의 남북 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이 있는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에 올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시민들은 어떻게 했나요? - 여자들은 명절 때처럼 고운 옷을 입고 나왔어요. - 평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온 것 같았어요. - 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나와서 꽃술을 들고 열렬히 환영했어요. ·반세기만에 북쪽의 최고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북쪽에서처럼 남쪽도 모두 나가서 환영해야 해요. - 남쪽도 통일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해요.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면 어떤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어떤 약속을 했으면 좋겠나요. -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관련한 약속을 할 것 같아요. - 절대 싸우지 말자는 약속이요. -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만나고 여행도 자유롭게 하고 서로 전화도 했으면 좋겠어요. - 남쪽의 어린이들이 북쪽으로 체험학습 갔으면 좋겠어요. 북쪽의 어린이들도 왔으면 좋겠어요. - 운동회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 2002년 월드컵 축구팀을 남북 단일팀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선택활동 ·2001년 남북정상이 만나면 무엇을 약속할지 생각해보고 남북어린이통일선언문 만들기(학습지1) ·김정일 국방위원장 환영 플랭카드 만들기(학습자료1)		자료 1 : 6·15남북공동선언의 내용과 해설 자료 2 : 이산가족의 아픔

정리	▶ 활동 발표 : - 만든 플랭카드를 들고 나와 다 같이 반갑습니다. 노래를 부른다. - 남북어린이 통일선언문 낭독을 한다. -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른다.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거나 캠코더에 담은 후 감상해도 좋다.) ▶ 김정일 위원장 서울 답방의 의의 - 작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약속 이행 -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 남과 북의 이해와 신뢰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통일과정에 대한 약속 이 이루어질 것임	캠코더 또는 카메라
----	---	------------------

<학습자료 1> 2001년 남북어린이통일선언문

1.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면 어떤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 예) -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과 관련한 약속을 할 것 같아요.
- 절대 싸우지 말자는 약속이요.
 -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만나고 여행도 자유롭게 하고 서로 전화도 했으면 좋겠어요.

2. 어린이 입장에서 어떤 약속을 했으면 좋겠나요?

- 예) - 남쪽의 어린이들이 북쪽으로 체험학습 갔으면 좋겠어요.
- 북쪽의 어린이들도 왔으면 좋겠어요.
 - 남북어린이운동회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 2002년 월드컵 축구팀을 남북 단일팀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 토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어린이통일공동선언문을 만들어 봅시다.

<학습자료 2> 답방환영 플랭카드 만들기

준비물 : A4용지 , 색종이, 가위, 풀, 깃대(또는 나무젓가락 여러 개), 셀로판테이프

1. 김정일 위원장 답방을 환영하는 문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토론허기
- 반갑습네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저씨!
- 환영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저씨! 등등. 모두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정한다.
2. A4 용지에 각각 한 글자에서 두 글자씩 만들 것을 나눈다.
3. 색종이에 큰 글씨로 오려서 글자를 만들고, 주변을 꽃이나 한반도 지도 등으로 자유롭게 꾸민다.
4. 완성한 후 가장자리를 풀로 붙여 하나의 플랭카드를 만든다.
5. 종이의 양쪽 끝에 나무젓가락이나 깃대를 단단히 붙여 돌돌 말았다 펴 수 있게 한다.

특히 전교조는 동 단체의 통일론을 담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통일위원회자료실의 각종 자료를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건인 2007년 7월 10일자 ‘반전평화자주통일 전국통일일꾼전진대회자료집’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왜 당당하게 그들의 통일론을 밝히지 못하는 것일까? 전교조의 통일관이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수용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반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반통일적 법. 제도를 폐지해가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6.15선언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측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전변(轉變)되어야 한다.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2004년 5월20일)”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인

정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은 1국가2정부의 연방제 외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 …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2001년 5월)

또한 전교조 부산지부의 《2006년 통일학교 자료집》을 보면, 일방적으로 북한 김정일의 선군정치노선을 찬양하고, 북한의 현대사를 그대로 수용하며 이를 선전하고 있다. 이외 동 자료집에는 일제시대의 해방투쟁, 해방이후 이북의 현대사라라는 주제 하에 북한당국의 역사서인 〈현대조선력사〉(1983년판)를 통째로 토씨까지 베껴 수록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역사조작한 현대사를 정당시하고 선전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바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중략…1990년대 북(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하였던 선군정치의 목적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곧 자주성의 완성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민족국가의 자주성을 완성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려는 민족사의 최고의 목적을 추구하였던 선군정치의 행군이었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자료집, 2006)

이러한 주장들은 북한당국의 역사관과 선군혁명노선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활동인 것이다. 도대체 전교조의 지향은 무엇인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1989년 5월 28일 기존 교육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참교육’의 기치 아래 출범했다. 전교조의 창립선언문을 보면 기존 교육제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잘 나타나 있다.

현재 우리교육의 현실은 모순 그 자체이다… 오늘 우리의 교육은 수십년 군사독재를 청산하여 민주화를 이루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동량을 키우는 민족사적 성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교육의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 그리고 통일의 그날까지 동지여, 전교조의 깃발 아래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전교조 창립선언문 중)

전교조는 단지 교육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민주화와 분단조국의 통일

까지도 지향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주장하는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관은 무엇인가? 그간 전교조가 전개한 활동 중 사회문제화된 것을 지적해보면 교육청 청사 및 사무실 점거·농성, 장기간 집회 지속, 학교장 경영권 약화를 위한 대립, 무리한 단체 교섭 요구, 조퇴-연가투쟁 등 빈번한 학습권 침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또한 전교조의 주요 사회활동을 보면, 친북반미성 활동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의정부 여중생 사망 관련 반미(反美)수업 실시(2002), 이라크전 관련 반전(反戰)교육 실시(2003년), 부산 반APEC 수업 및 동영상 게재(2005), 북한 역사교과서를 베낀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재(2006), 제주 4·3사건 관련 반미교육, 북한 선군정치노선 선전포스터 게재(2006), 6.15 남북공동수업(2007)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러한 전교조의 친북반북관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교조의 친북반미관은 전교조에서 발행한 《이겨레 살리는 통일》(2001년)이란 책자에 잘 집약되어 있는 바, 이를 통해 전교조의 친북반미 통일관을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위 책자는 대한민국 국가정통성을 외면하고, 반민족적인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는 친북통일교재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재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겨레 살리는 통일’이 아니라 ‘이 겨레와 민족을 죽이는 친북통일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다.

▶ 『한반도의 통일은 독일식 흡수통일로는 갈 수 없으며... 흡수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며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부정하고 있다.

▶ 안보교육이 민족화해교육과 민족대단결을 저해한다며, 냉전意識과 냉전세력의 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를 외부의 침략으로 보호하자는 안보교육이 왜 문제라는 것인가? 실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며 진정한 민족화해와 민족대단결을 저해하는 것은 안보교육이 아니라, 바로 북한 김정일 정권과 친북좌파세력의 적화통일관임을 지적한다.

▶ 전교조는 민족화해를 위해 한국전쟁의 전후맥락을 교육시켜야 한다며, 미국의 분단정책 역사조명, 남침유도설 등을 거명하고 북한의 명백한 남침전쟁과 이의 민족사적 책임추궁을 회피하며 결국 북한책임론을 희석시키고 있다. 역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진실 되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남북화해라는 명분 하에 한민족사의 대재앙이며 불행인 한국전쟁이 발발원인은 북한의 불법남침 책임을 도외시키고 있다.

▶ 해방직후 좌익분자들의 무장폭동인 여순 주둔군 반란사건이나 제주4.3폭동을 미군정과 분단주의자에 대한 인민항쟁으로 미화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역사관과 일치하는 시각이다.

▶ 전교조는 민족화해를 위한 과제로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냉전세력의 제어”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결국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동노선에 동조하여 이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동 책자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민족화해란 바로 북한 김정일 집단과 국내 친북좌파세력의 화해인 것이지 진정한 민족화해는 아님을 지적한다. 전교조의 통일교육교재는 균형적이고 객관적 남북인식을 통한 민족화해와 통일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안보의식의 무장해제를 정당시하며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와 양보를 강조하고 친북의식화를 자행하는 책자이다. 특히 이러한 교재를 가지고 아직 북한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지능력을 갖추지 못한 초중고생들에게 통일교육을 행하는 지침서로 삼는다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다.

“2005년은 자주통일원년의 해 주한미군철군의 해이다. 이는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끼리 민족 공조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외세공조는 노예이고, 분열이고, 매국이고 죽음일 뿐이다...미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체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한미군사동맹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압박 및 분열정책을 펼 것이다...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고 친미수구세력들을 척결하여 민주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 나가야 한다.”

(2005년 전교조 통일위 사업계획, 中)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은 자신의 국익을 지키고 패권을 유지하며 한국에 대한 지배를 영속할 수 있는 힘 있는 방안일 것이다...군 작전지휘권 등 군사주권의 유린이 친미 군부독재를 양산하고 미국의 신식민지적 지배를 유지시키는 기초가 되었다...지금 이 땅에는 수십 년간 동족을 살상하기 위한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국토의 곳곳이 미군의 군사훈련지로 전략하고 말았다. sofa협정으로 이 땅의 미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식민지배자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은 깃발만 꽂으면 즉시 미군의 땅이 되었다...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의 절대 절명의 과제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간섭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2001년 5월)

위의 전교조 인용문을 보면, 전교조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친미수구세력 척결”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조국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상투적인 대남투쟁노선을 지지하여 정당화하고 고무, 선전하는 것이다. 이상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전교조는 북한의 통일노선을 수용하여 지지, 선전함을 알 수 있다.

(8)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2001년 2월 11일 ‘자주와 민족의 평화통일, 사회민주화’에 헌신한다는 기치아래 결성된 청년운동단체이다.

한청은 동 단체의 활동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초 강령에서 ‘연방제 통일강령’을 명시하였으나, 현재 수정 강령에서 연방제부분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한청의 이적단체성 시비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또한 6.15공동선언 이후 조성된 정세에 부응하여 합법화하려는 전술적 조치로 생각된다.

“우리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사업을 전개하고 6.15 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여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청 제1기, 제2기 강령 6항, 2002.2.23)

“우리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사업을 전개하고 6.15 공동선언을 지지 이행하여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한청 수정 강령 6항, 2007 현재)

한청의 최초 강령은 명백히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인 국가연합제안을 부정하고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통일안을 수용·동조하여 정당화하고 지지, 채택하는 것이다. 한청은 동 강령에서 남북한 당국이 합의한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원칙)과 《6.15 공동선언》의 지지 이행의 연장선에서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나, 남북이 6.15 공동선언 2항에서 합의한 것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절충’이지 일방적으로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한은 우리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6.15 공동선언 2항」(연합제와 연방제 절충)이 연방제통일을 남북이 합의한 것이라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한청의 위 강령은 아래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북한측 주장을 수

용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주장〉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6.15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며 …중략… 연방제통일방안이야 말로 민족의 의사와 이익,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조국통일을 가장 빠르고 쉽게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최선의 통일의 방도로 되는 것이다. …중략… 6.15 북남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연방제통일을 지향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

(‘민족자주통일은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 2002년 2월 5일자 평양방송 논설)

한청은 강령 외에 《한청 창립대회 자료집》, 《1-2기 정기대의원 총회 자료집》 등 각종 발간자료에서 연방제통일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더나가 한청 의장인 전상봉의 ‘6.15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실천과제’ 이라는 기고문과 한청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6.15 공동선언이 연방제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글을 수록하며 일관되게 북한의 연방제통일을 정당화하고 있다. 특히 한청은 6.15공동선언이 연방제로 나가기 위한 토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인 국가연합제안을 부정하고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통일론을 수용·동조하여 이의 수행을 선동하는 것이다.

“전국연합과 범민련을 중심으로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한청 창립선언문 中, 2001.2.10)

“분명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며 보검이다…중략… 휘날리는 우리의 깃발 당당하고 자랑스레 움켜쥐고 연방통일조국으로 힘차게 달려갈 것을 한국청년의 이름으로 결의한다.”

(한청, 한국청년조국통일 결의대회 결의문, 2001.8.15)

“지난해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공동선언의 발표로 우리민족은 마침내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중략… 이제 우리는 615 공동선언의 깃발을 높이 들고 조국통일의 선봉에서 투쟁할 것이다. 그리하여 올해를 조국통일의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통일의 해로 장식하고 연방통일의 주역이 될 것이다.” (한청,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특별결의문, 2001. 2.10)

한청은 <<6.15시대, 변혁과 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방침>>(2006)이란 문건에서 6.15 시대는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의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완성하자고 주장한다. 여기의 자주민주통일이란 북한의 대남투쟁 3대과제인 자주(반미자주), 민주(반파쇼민주), 통일(연방제 조국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점은 결국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남북이 합의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절충’정신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하는 것이다.

<기본방침>

1. 남북해외 우리민족과 이남 민중들의 투쟁에 의해 개막된 6.15시대의 변혁적 의미는 아래와 같다.

- 6.15공동선언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6.15시대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성취하는데 그 전략적 목표가 있다.
- 6.15시대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의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민족의 대단합과 민중의 자주적 진출을 가속화하여 변혁과 통일의 완성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 6.15시대, 자주 민주 통일의 완성은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으며, 변혁과 통일의 성취는 민족의 단합된 힘과 민중들의 투쟁에 의해 추동된다. 특히 6.15시대, 변혁과 통일이 이행 발전되는 과정은 광범위한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이 결합되는 형태를 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청, 6.15시대, 변혁과 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방침, 2006)

한청은 <<한반도 평화통일자료집>>(2007.5)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구체적 내용을 들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사-유엔사 해체”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투쟁노선과 맥락을 같이하는 주장이다.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를 실현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함으로써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고 △북미 정치군사적 대결구

조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질서를 구축하며 △남북 군사적 대결구조를 청산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실현하며 △대결적 남북관계를 화해 협력적 남북관계로 전환하고, 평화적 공존과 통일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 수 및 한미연합사 유엔사의 해체와 북미수교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축 △남북 화해협 력과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청, 한반도평화통일자료집, 2007.5, 4-5면)

(9) 평통사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는 1994년 6월 4일 ‘한반도의 평화실현과 민족의 자주평화통일 실현’이라는 기치 하에 결성된 단체이다.

평통사는 공식적으로 통일방안을 확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통사 임원들의 통일관에서 그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홍근수(평통사 상임대표)는 “4대 정치적 과제인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미군철수, 연방제적 통일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 … 진정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가능한 통일방안은 연방제적인 통일방식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홍근수 논설집 「자주통일로 가는 길」)이라며 그들이 내세우는 평화체제가 ‘연방제’의 사전 단계라는 주장을 펴왔다.

김종일(평통사 사무처장)은 2000년 12월 11~14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6.15남북공동선언 지지관철을 위한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에서 발표한 토론문에서 한반도의 분단이 미국에 의해 강제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통일의 장애물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항한 반미자주화투쟁이 바로 통일투쟁이라 강변하며 이의 투쟁을 주장한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반도의 분단은 미국에 의해 강제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은 오늘도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분단의 역사는 곧 통일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중략...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장애물이 불평등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대중적인 반미자주화투쟁이 역사의 무대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이 역사의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뒷받침하는 일체의 군사, 정치, 경제적 조치에 대하여 결코 용납하지 않는 투쟁으로

발전해갈 것이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양상을 띠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한미 FTA 체결국면과 맞물려 자주와 예측, 분단과 통일, 애국과 매국의 대결전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김종일, 6.15남북공동선언 지지관철을 위한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 토론문, 2000.12))

또한 평통사의 지도위원인 강정구 교수 등의 발언에서도 친북편향의 통일지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평통사의 <<2007년 평통사 임원워크숍 자료집>>(2007.2)에 수록되어 있는 ‘2007년 평통사의 과제’에 잘 나타나 있다. 평통사는 올해 과제로 1) “주한미군의 아·태 침략군화 및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저지, 평택투쟁, 전시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독수리연습(RSOI&FE), 을지포커스렌즈연습(UFL) 등 전쟁연습의 반평화성과 반통일성 폭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반대” 등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평통사의 중장기적 발전과제로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통일방안에 대한 준비와 여론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강정구 교수의 말과 글	
	2001. 8.17일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 (8·15민족대축전 방북단 만경대 방영록)
	2005. 3.18일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칼럼)
	2005. 5.30일 '국방백서는 '대미 용비어천가'이며 미군 주둔을 정당화해 민족자주를 훼손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시킨다.' (국방백서 바로잡기 토론회)
	2005. 7.27일 '6·25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다.' '맥아더 장군은 민족 비극의 원조인 38선 분단을 집행한 집달리, 폭력을 감행한 전쟁광이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칼럼)
	2005. 9.30일 "6·25전쟁에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달 이내에 끝났을 것이고 사상자는 1만 명 미만이었을 것이다. 전쟁으로 희생된 400만 명에게 미국은 원수다." "1946년 미 군정청의 여론조사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지는 77%였다. 대부분이 원하는 체제를 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반도정세 토론회)
2005.10.11일	'만약 외세개입이 없고 조선사회가 스스로 결정했다면, 인민민주주의를 거쳐 사회주의로 가는 과정이었다.' '주한미군은 점령군은 아니지만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실체... 그런 면에서 (카투사로 군복무를 마친) 작은 아들 일은 부끄럽다.' (한겨레신문 인터뷰)
2005.10.12일	"중이 신문들이 지면 제약으로 섀세이셔널한 부분만 부각하는 경우가 많다. 당분간 종이 신문 말고 인터넷 매체를 상대하겠다." (한국일보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10) 기타: IS(국제사회주의자)

IS(International Socialists : 국제사회주의자)그룹은 국내 좌파권중 트로츠키파의 대표적 조직으로 1990년 초 동구사회주의권 몰락을 계기로 기존 PD(특히 제파PD계)파에서 활동 하던 추종세력과 함께 IS의 강령적인 「한국 트로츠키자의 선언(1990)」을 작성하고, 이어 1990년 11월경 새로운 강령인 「1992 우리의 입장」을 채택하며 결성된 급진단체이다. 이후 IS는 <10월로 가는 길>(여기의 10월은 1917년 러시아 10월혁명을 의미함), <노동자 권 력>등을 발행해 오며 국제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해오다 1992년 당국에 의해 조직지도부 일 부가 검거, 그 실체를 드러낸 바 있는데도 현재까지 활동해오고 있다.

IS는 타 재야권과는 다른 통일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 노동자계급이 연대하여 남한 국가자본주의정권과 북한 의 가짜 사회주의정권인 김정일 정권을 동시에 타도하고, 새로운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통 일사회주의국가를 한반도에 건설하자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자들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주의 안에서 모든 민족의 통일이다. 하지만 이것 은 자유로운 민족의 자유로운 연합이어야 한다. ...중략... 남한의 사회주의자는 남북 한 지배자들과 그 국가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조국이 없다. 노00도 김일성

도 그에게는 반동국가 자본일 뿐이며, 그는 남북한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통해 두 지배계급과 두 국가를 혁명으로 전복하고 한반도 전체에 노동자권력을 세우는 것을 과도 강령으로 삼을 것이다(IS, 우리의 입장 중)

3. 재야통일론의 평가와 문제점

첫째, 재야통일론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정부의 통일방안을 부정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을 상징하는 국가연합 제안을 ‘통일방안이 아닌 분단고착화방안’, ‘전쟁과 불안을 일상화하는 방안’, ‘통일되어서는 안 되는 통일방안’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들이 단골로 추앙하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 2항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통일인식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국가이념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국가적인 통일인식이다.

둘째, 북한의 통일관과 연방제통일방안을 전면 지지, 채택하고 있다. 재야권은 북한의 통일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받들고 이를 충실히 반영한 연방제 통일방안이야말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이라 찬양하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포함한 북한의 통일방침인 ‘조국통일 3대헌장’(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통일3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지지, 찬양하며 채택하고 있다. 일부세력들은 그들의 통일방안을 ‘자주적 평화통일방안’이라고 내세우며 마치 진정한 자유민주 평화통일방안인양 은연하기도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통일방안은 위장 평화통일방안으로 실체는 적화혁명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셋째, 재야통일론은 북한의 대남적화 혁명전략에 영합, 부응하는 통일론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통일노선은 그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자주적인 평화통일방안이 아니라, ‘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이라는 북한의 전조선혁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위장)평화적 방도에 의한’ 적화혁명의 수단인 것이다.

6.15 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의 분위기로 전환되어 유화국면을 연 점은 원칙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되나,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본질적인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 ‘전술적 변화’의 수준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북한이 아직 적화혁명전략을 포기했다는 징후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여전히 주체혁명사상과 선군혁명노선에 입각한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 채택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의 적화통일노선에 영합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발전을 명백히 저해하며 도전하는 이적행위인 것이다.

넷째, 재야권이 1999년 이래 공통으로 ‘자주적 민간통일운동론의 4대 정치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방안 합의 확산”은 북한의 핵심적인 대남적화혁명의 선결조건임에 다를 아니다. 재야권은 통일론을 전개하면서 단골로 ‘6.15 공동선언의 이행, 실천’을 강조하고, 통일의 전제조건과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미명 하에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군사훈련 중지, 파쇼폭압기구(국정원, 기무사, 경찰 보안수사대 지칭) 해체, 한총련-범민련 합법화, 친미수구세력 척결”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대남노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그 저의는 결국 대남적화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세계최강의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군사적 공백상태를 초래하고, 제한적 방어훈련인 한미 군사훈련을 저지하여 군사력의 저하를 노리고,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켜 공산당을 합법화하고 국가안보기관을 와해시켜 마음껏 남한 내의 간첩이나 친북좌익세력의 활동을

고무하여, 남한사회의 혼란을 조성한 다음 무력으로 적화통일 하겠다는 것인바 유념해야 한다.

다섯째, 재야권이 북한과 연대하여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자주교류, 자주통일운동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전적으로 북한의 통일전선공작에 악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 이후 가장 두드러진 북한의 대남전술의 특징은 상하층 통일전선공작이 더욱 정교화되고 강화된 것이다.³⁵⁾ 북한은 6.15 공동선언 이후 조성된 합법공간에 편승해 남북대화 및 우리 사회 고위층 인사들의 방북초청을 통해 상층 통일전선 구축에 주력하고, 학술, 종교, 언론, 체육, 문화 등 각 분야의 민간급 남북교류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방북자들을 대상으로 중-하층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간고한 노력 끝에 구축에 성공한 상층-중층-하층을 연결하는 통일전선의 배합공작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이 구사하는 통일전선의 핵심키워드(keyword)는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제일주의’, ‘민족대단결’ 및 ‘민족공조’이다. 북한은 ‘민족’을 내세워, 국내에 친북반미(親北反美)전선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북한핵문제 해결의 ‘인질’로 한국국민을 활용하려는 술책을 구사하고 있다. 2005년의 3대 민족공조(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공조)와 2006년의 3대 애국운동(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운동), 2007년의 3대사업(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이라는 구호도 통일전선차원의 선동구호이다. 또한 북한은 합법적으로 방문하는 방북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대의식의 희석화와 친북의식화를 꾀하는 ‘영향공작’(Influential Operation)³⁶⁾을 정교히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재야권이 마치 통일운동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행사하며, 북한과 연대하여 연출하고 있는 우리민족통일대회, 민족통일축전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의 대남적화공작에 놀아나는 행위임을 직시해야 한다.

여섯째, 재야통일론은 우리 사회에 감상적 통일론과 민족공조론을 확산시켜, 부문별한 친북사조와 연공연복의식을 유포시키고 결국 남남갈등과 사회교란 및 국론분열을 확대재생산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케 하고 더나가 국가발전역량을 훼손하는 것이다.

재야권의 집중적인 감상적 통일론과 민족공조 공세의 파장으로 우리 사회 일각에 조성된 안이한 친북사조의 한 사례를 들어 보자.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전격 단행하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통일되면, 우리 것이 되며 우리민족이 강

35) 통일전선이란 북한이 대남혁명전술중 가장 중요시하는 전술로 상층-중층-하층통일전선으로 구분되는데, 상층통전은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종교계 등 지도층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중층 통전은 우리 사회내 중간층을, 하층통전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및 각계각층 민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합전술이다. 통일전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동열, “북한의 통일전선론체계와 구사실태”, 『북한학보 제31집』 (서울:북한연구소, 2006) 참조

36) 영향공작이란 구 소련의 비밀경찰인 KGB가 냉전시대에 미국 및 서방세계 주민들의 여론, 감정, 행동 등을 소련에 유리하게 작용토록 유도했던 심리전 공작의 일종으로, 자국에 대한 상대방 국민의 적대의식을 유화시켜 자국이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작이다.

대국이 되는데 왜 북한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핵보유 -민족통일 -강대국’이라는 등식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찬성하는 어처구니없는 논조들이 등장한바 있다. 우리 민족의 생존과 인류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보유를 경계하고 반대하기는커녕, 일부 시민들은 친북재야권의 선동에 부화뇌동하여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은 동족인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이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통일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민주 통일이 아니라 적화통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자기 주민들의 세끼 밥도 제대로 풍족히 먹이지 못하고 굶주리게 하면서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의 목적인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위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신봉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적화 통일을 정당화하는 이적행위를 행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재야권이 정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생각한다면, 북한정권의 통일노선을 표절하고 벤치마킹(benchmarking)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한민족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통일론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선전화보 : 노동신문 1998년 12월 19일 5면

표 8. 북한 및 국내 재야단체의 통일론 비교

구 분	통일원칙	통일방안	선결조건	통일구호 (2007년)	한국통일 방안평가
한 국	자주, 평화, 민주	국가연합제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없 음	없 음	금 정
북 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연방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3대과업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부 정 (분단고착화 방안)
범민련 남측본부	○	○	○	○	○
전국연합	○	○	○	○	○
통일연대	○	○	○	○	○
실천연대	○	○	○	○	○
한총련	○	○	○	○	○
민주노총	○	○	○	○	○
전교조	○	○	○	○	○
평통사	○	○	○	○	○
한 청	○	○	○	○	○

V. 맺는 말

1. 향후 전망

(1) 기초

북한 김정일의 조국통일론으로 대표되는 현재 북한의 통일노선은 그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자주적인 평화통일방안이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이라는 북한의 전조선혁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격 지워지고 있다. 향후에도 주체사상과 선군노선에 기반 한 북한 김정일 정권이 건재하는 한 북한 통일노선의 목표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전술적 차원의 통일공세가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은 61.5공동선언을 기점으로 우선순위를 변경한 이른바 ‘평화적 전도에 의한 적화통일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 임하여 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절충’(연방연합제 통일)을 통한 통일모색을 선언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³⁷⁾

따라서, 정부당국이 재야단체의 무분별한 통일논의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향후에도 국내 재야권의 친북편향 통일론은 더욱 정교하게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재야권은 북한과 보조를 맞추어, 그들의 궁극적인 전략목표인 이른바 한국사회변혁 지향전략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로 은의한 채, 상황변화 따라 다양한 전술적 변화를 보이며 통일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친북성향의 재야권에서 올해 정세를 전망하면서, 2007년에 “우리 민족과 미국의 최후 대결전에서 우리민족이 승리를 만들어갈 결심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7년 대선(대통령선거)이 자주통일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우리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른바 진보개혁 평화세력의 대연합으로 반통일보수세력(한나라당 지칭)의 집권을 막고,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³⁸⁾ 따라서 국내 재야권은 올 대통령선거를 평화통일세력과 전쟁도발세력의 구도로 나누고, 그들의 통일론을 선동하는 장(場)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37) 유동열, “북한의 통일전선체계와 구사실태”, 『북한학보 31집』, (서울:북한연구소, 2006), 189-190면

38) 15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 2007.2.10. 36면, 한총련 외 여기에서 다른 대부분의 단체들의 이러한 시각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2007년 신년사에서 주장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2) 세부 전망

첫째, 국내 재야권은 현재의 유화적인 남북관계 상황이 단절되지 않는 한, 북한의 대남 통일노선과 보조를 맞추며 현정부에 대한 타도투쟁을 노골화하지 않은 채, 현정부의 통일 시책에 대해 사안별로 비판하며 6.15 공동선언의 이행이란 명분 하에 친북(親北) 통일연대를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³⁹⁾

둘째, 국내 재야권은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를 강조하여, 2007년 북한의 조국통일구호인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 과업수행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내 재야권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자민통(자주-민주-통일)노선과 3대 과업(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수행을 토대로 하여 6.15 공동선언과 자주적 평화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미명하에, ①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투쟁 ② 보수우익세력 척결투쟁(반한나라당 투쟁 포함) ③ 조국통일, 6.15 공동선언이행 투쟁 ④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투쟁 등을 집중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내 재야권은 올 하반기부터 2007년 대선(대통령선거)에 대응한 대대적인 대선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한 바 있지만, 재야권에서는 올 대선을 연방통일 조국 건설을 위한 낮은 단계 연방진입의 관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일과 연계된 대선투쟁을 전면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현재까지 표출된, 국내 재야권의 대선투쟁방향은 북한의 대선투쟁 지침과 맥락을 같이한다. 북한은 이번 대선에서 이른바 한국내 친북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선거구도를 평화애호세력(=6.15지지세력, 친북진보개혁세력) 대 전쟁도발세력(=6.15반대세력, 친미보수우익세력)으로 편성하고, 이른바 평화공세, 민족공세를 통해 국내 대선판도에 친북벨트를 구축하려는 공작에 매진하고 있다. 이는 역대 선거에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평화 대 전쟁’으로 대치한 것인데, 『한나라당 집권하면 전쟁난다』라는 구호에서 상징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친북정권이 창출되지 않으면 전쟁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공갈, 협박으로 북한 스스로가 평화애호세력이 아닌 전쟁도발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북한이 하달한 주요 선거투쟁 구호를 보면 “진보개혁세력의 대연합으로 친미보수의 대연합을 타승하자”, “오늘의 투쟁은 6.15세력(평화통일세력) 대 반 6.15세력(반통일전쟁세력)간의 첨예한 싸움이다”, “각계층 민중은 단결의 위력으로 친미보수세력의 전쟁도발 흥계를 파탄시키고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자”, “이 땅에 미국군대가 없고 한나라당이 없는 평화로운 새 정치풍토를 마련하자!” 등이다. 여기서 보듯이 금번 북한의 대선투쟁의 핵심선동 메뉴는

39) 국내 친북재야권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전술적으로 현정부를 친북좌파 개혁으로 유도하는 측면에서 타도대상이 아닌 견인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전략적으로 현정부를 타도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쟁세력=한나라당=친미보수우익세력=반6.15세력’의 척결 및 타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호는 국내 재야권의 투쟁구호에서도 자주 표출되고 있다.⁴⁰⁾

다섯째, 국내 재야권은 6.15 이후 조성된 남북 화해분위기에 편승하여 연공연복활동의 일환으로 노동, 학생 등 각 분야의 민간급교류를 위한 방북추진 등 이른바 ‘자주교류투쟁’을 강화할 것이며, 이의 일환으로 북한과 연대하여, ‘8.15 민족통일축전행사’ 등을 확대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국내 재야권간 통일논의 일원화와 효율적 통일운동 전개를 위해 단체 간 연대활동과 합법화투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친북통일론 강화를 위해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각 단체들과의 연대연합전선 구축을 지속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재야권의 연대연합운동은 북한의 통일전선형성 원칙에 입각해서 평가해 보건대, 하층 통일전선의 차원이며 낮은 형태의 부분적 연합전선체 형성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높은 형태의 전면적 연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⁴¹⁾ 이들이 추진하는 연대연합운동의 최소강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관철과 낮은 단계 연방제 지지 확산, 친미우익세력 척결, 민족민주진영의 총단결」이 될 것이다.

끝으로, 국내 재야권은 친북통일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인터넷공간에서 사이버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각 재야권은 이미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의 ‘포털’화 전략을 구현한 이래 사이버투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 대처방안: 올바른 통일론 조성을 위한 제언

자주적 평화통일론으로 선전되고 있는 국내 재야권의 친북통일운동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친북통일론이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주목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친북통일론과 이를 수행하는 친북통일운동가들이 발붙일 수 없는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기본이다. 이에 대한 기본적 접근방법과 건전한 통일론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재야권의 통일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요망된다. 자주적 평화통일론으로 위장된 재야통일론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의 통일정책은 시행착오를 겪

40)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동열, “북한의 대선개입공작과 대응방안”, 『한국발전리뷰』, 제157호/2007년 4월호(서울: 한국발전연구원, 2007), 66-73면 참조

41) 국내 운동권의 뿌리 깊은 계파간 반목, 해계모니장악을 위한 갈등, 조직내 지분확보 진통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재야운동권 전계파가 참가하는 높은 형태의 전면적 연합체 구축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으며 혼란스러워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야통일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통일론에 대한 실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시기 국내 재야권의 통일론은 대부분 북한의 통일노선을 수용, 채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재야권 및 북한당국의 정교한 통일공세에 대응한 일종의 사상전(思想戰)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는 국내 재야권과 북한이 전개하는 연방연합제 통일방안 등 연방제통일공세 등에 대응하여 사안별로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이들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규명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북한이나 재야권의 위장된 평화통일 공세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야권이 통일의 걸림돌로 선전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투쟁, 반보수연합전선 구축, 친미수구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이 자유민주통일이 아닌 적화혁명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적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날로 정교화하고 있는 재야권의 통일공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상당 수준의 논리적 대응망 개발 및 구축이 요망된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입지가 어려워져 재야 안보위해세력의 무분별한 통일공세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념투쟁인 ‘사상전’을 통한 친북통일론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셋째, 정부당국은 올바른 통일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현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 대다수와 주변국가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에 대해 체계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국내 외에 발호하고 있는 북한의 감상적 통일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하게 분출되고 있는 재야권 등 민간진영의 통일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들 논의를 수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통일논의 기구의 신설·운영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 특히, 정부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통일논의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며, 통일정책의 여론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의 일환으로 통일정책 환류(feed-back)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통일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국민친화적 통일홍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현재 통일부가 운영하고 있는 ‘통일고문회의’의 범국민적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 각계의 전문가그룹을 영입하여 통일정책 및 통일운동의 지도성을 갖도록 하는 한편, 무분별한 통일논의의 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넷째, 건전한 통일론의 논의행태 정착을 위해 시민사회, 언론 및 정치권의 지원과 노력이 절실하다. 친북통일론을 무력화하고 건전한 통일문화를 조성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및 특히 언론은 친북편향적 통일론의 실체와 해악성을 널리 알리고 재야권이 정상적 궤도에서 움직이도록 협조,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친북편향의 통일론에 매몰되지 않고, 이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자율적인 대응력을 지

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재야권의 정교한 통일 의식화공작을 사전에 차단하는 지름길이다.

다섯째, 재야권이 통일운동을 빙자하여 주도하는 불법 가두시위, 집회 등 불법활동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법집행이 요망된다. 재야권의 불법 친북통일론의 확산을 제어하기 위해 보안경찰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재야권 및 북한의 통일투쟁공세를 안보차원에서 탐지, 방어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check list, 점검목록)’를 사안별, 분야별로 작성하여 예방적 차원의 건전 통일운동을 유도해야 한다.

여섯째, 6.15 공동선언 이후 합법-비합법적 공간을 활용하여 전개하는 재야권의 이른바 ‘남북 자주교류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남북교류가 북한의 대남통일전선공작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남북교류 당사자들이 이른바 남북 민간급 통일교류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남북 민간급 교류란 정확히 말하면 남한 민간단체와 북한당국의 교류인 것이다. 북한은 체제속성상 결코 민간단체나 개별인사가 존재할 수 없으며, 북한이 민간단체라고 주장하는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조국전선(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아태위(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불교도연맹 등은 순수한 민간단체가 아니라 모두 북한당국과 조선로동당의 방침을 충실히 수행하는 소속기관이거나 외곽단체인 것이다. 따라서 대북교류에 나서는 우리측 민간단체들은 북한당국과 교류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남북 민간교류는 요원한 것이며,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⁴²⁾

일곱째, 남북교류의 확대에 따른 북한의 통일전선 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통일부 주관의 방북자교육 내실화(통일전선공작상의 위험성 소개) △대남공작에 악용당할 수 있는 남북교류관련법의 개정 및 보완 △방북자, 대북사업자, 북한주민 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 △대북사업의 대남공작 편익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대응 △정부부처 내 대북사업 전문가의 충원 및 양성 △해외장기체류자 및 친북인사 입출입 관리 등이 필요하다⁴³⁾

여덟째, 친북통일론이 확산되는 원인 중 하나는 남한적화혁명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북한의 정교한 대남통일전선공작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공작을 차단하고 한총련의 지도채널인 ‘평양방송’(대남전용방송)과 ‘구국전선’과 같은 친북인터넷사이트의 차단 등과 같이, 북한의 대남공작과 한총련의 연계공작을 차단, 분쇄시키기 위한 활동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 안보수사기관의 대공대응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42) 유동열, “북한의 통일전선론 체계와 구사실태”, 192면

43) 유동열, 『북한 대남전략체계와 기구의 실제』 (서울: 통일교육원, 2006), 47-48면

아홉째, 급속히 확산되고 정교화하고 있는 국내 재야권 및 북한권의 불법 사이버 통일공세를 규제할 관련 법령의 보완 및 신설이 요망된다. 예를 들면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사이버 안보법’(가칭)의 제정이나 또는 국가보안법 내에 사이버범죄의 규제조항 등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 통일공세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역(逆) 사이버공세’를 구사해야 한다.

열째, 재야권의 친북통일론에 대응한 민간 차원의 건전 자유민주 통일네트워크(가칭)를 구축해야 한다. 실정법에 의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바, 건전 자유시민세력 등을 주축으로 친북통일공세를 민간차원에서 감시하고 대응하는 자율적인 대응책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민간역량을 결집하고 유사시 조정할 수 있는 ‘민간 자유민주통일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에서 2000년 6.15 공동선언 발표 직후, 전 인민군에게 학습참고자료로 하달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국내 재야권은 북한당국의 연방제통일론이 가장 합리적이고 유일한 자주적 평화통일방안이라 선전하며 이를 조국통일의 보검이라 찬양하고 ‘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연방제통일조국 달성’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앞서 지적했듯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동안 대결과 반목으로 점철된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의 분위기로 전환되어 화해국면을 연출시킨 점은 원칙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통일노선과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가 본질적인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 ‘전술적 변화’의 수준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아래의 인용문은 6.15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의 무력적화통일론을 명백히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북한의 통일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국내 재야권의 활동이야말로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임을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정세에서는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민족이 분열된 이래 처음으로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회담이 마련되고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었으며 그에 기초하여 북과 남 사이에 대화와 접촉 교류가 폭 넓게 벌어지고 있다. ...중략...

적들이 무릎을 꿇고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찾아온다고 해서 적들의 본성이 결코 변한 것이 아니다.

...중략...

혁명의 총대를 틀어잡고 계급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군인들은 현정세의 본질을 똑바로 꿰뚫어 보아야 하며 무력으로 적들을 소멸하고 남녘땅을 해방 할 혁명적

입장을 더욱 철저히 전개해야 한다.

…중략…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나의 통일관은 본질에 있어 무력통일관입니다》 흘러 간 반세기의 역사는 우리나라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국통일은 오직 무력에 의한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모든 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무력통일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무력으로 기어이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

(조선인민군 총 정치국, 적에 대한 환상을 없애고 계급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버릴 데 대하여, 학습참고자료,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0, 10-13면)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만길, 『우리통일, 어떻게 할까요』 (서울 : 당대, 2004)
-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해설자료』 (서울 : 국토통일원, 1889)
- _____, 8.15 대통령경축사 해설자료(서울 : 국토통일원, 1994)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_____,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1997.8.4)
- 김창순, “북한의 전략전술”, 『김창순북한연구전집 9권』 (서울 : 북한연구소, 1999)
- 김양선·최철웅, 『사회주의-건설리론, 위대한 주체사상총서5』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 김태영, 『애국애족의 통일방안』 (평양 : 평양출판사, 2001)
-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2000년대 열리는 통일시대』 (서울 : 동아일보사, 1993)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서울 : 도서출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2)
-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서울 : 북한연구소, 1998)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2-1992』 (서울 : 북한연구소, 1993)
- 북한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혁명리론』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공작』 (서울 : 북한연구소, 1996)
- 안영일·정철만, 『조국통일투쟁사』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유동열, 『한국좌익학생운동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민족정론사, 1995)
- _____,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서울 : 다나, 1996)
- _____, “북한의 대남전략과 한총련”, 북한연구소 학술회의발표문(1996.11.6)
- _____,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운용실상”, 『남북교류대비소양교육교재』 (서울 : 한국자유총연맹, 1998)
- _____, “대남전략 관점에서 본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 『북한』 1998년 6월호(서울 : 북한연구소, 1998)
- _____, “남북화해시대의 북한의 대남전략”, 『북한』 2001년 2월호(서울 : 북한연구소, 2002)
- _____, “민간교류를 틈탄 통일전선 영향공작을 경계한다”, 『자유공론』 2002년 10월호(서울 : 한국자유총연맹, 2002)
- _____,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대남전략 평가”, 『군사논단』 2002년 겨울호(서울 : 한국군사학회, 2002)
- _____, “적화된 인터넷매체를 고발한다” 『한국발전리뷰』 2003년 6월호(서울 : 한국발전연구원, 2003)

- _____, 『북한의 대남전략체계와 기구의 실체』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 _____, 북한의 통일전략, 『보안수사요원교재』 (2006)
- _____, 북한의 통일전선론체계와 구사실태, 『북한학보』 제31집(서울 : 북한학회, 북한연구소, 2006)
- _____, “북한의 대선개입공작과 대응방안”, 『한국발전리뷰』 제157호(서울 : 한국발전연구원, 2007)
- 장 석,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연구』 (평양:평양출판사, 2001)
- 조명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전민족적통일전선 형성에 관한 사상』 (평양 : 조국통일사, 1981)
- 제성호, 북한연방제안의 분석 및 평가, 『연구보고서』 91-02(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1.8).
- _____,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 통일방안 해설서』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11).
- _____, “정부, 재야 및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비교연구,” 『개방화에 따른 국제범죄와 대응책』 (서울: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1994)
- _____,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비교 : 국제법적 시각에서,”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1호(2001.7).
- _____, “북한의 통일관과 평화관의 분석 및 전망,” 『남북한 화해·협력시대의 안보과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세미나 발표문집(제13차 안보학술회의)(2001.6.14).
- _____, “새 정부의 대북·통일정책방향,” 『바른사회』, 통권 4권, 2003년 2월호.
- _____,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 : 전략적 의도와 문제점,” 『북한학보』, 제31집(2006.10).
- _____, “21세기 한반도 정세와 한민족이 나가야 할 길,” 한민대학교/세계사이버대학, 『제3차 한민족 국제학술회의』, 2006.6.10.
- 통일부, 『2006 북한개요』 (서울 : 통일부, 2006)
- _____, 『2006 통일백서』 (서울 : 통일부, 2004)
- _____, 『6.15 5주년 남북관계 추진현황 및 평가』 (서울 : 통일부, 2005)
- 통일교육원, 2007 통일문제이해(서울 : 통일교육원, 2007)
- _____, 『2007 북한이해』 (서울 : 통일교육원, 2007)
-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한반도 통일과 재야단체 통일론의 실체



2002년 6월 21일 1판1쇄 발행

2022년 2월 17일 1판2쇄 발행

발행처	자유기업원	발행인	최승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7층 (07236)		
전화	02-3774-5000	팩스	0502-797-5058

※본 파일은 2002년 발행한 NGO시리즈 NO.17 『한반도 통일과 재야단체 통일론의 실체』 책을 재편집하여 PDF로 변환한 것입니다.

© 자유기업원, 2022

비매품